
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(2023-2027)

2023. 2



관계부처합동



목 차



I. 수립 배경 및 경과	1
II. 청소년정책 환경	3
III. 제6차 기본계획 평가	10
1. 그 간의 주요 성과(2018~2022)	11
2. 한계 및 향후 과제	14
IV. 추진 방향	17
1. 수립 방향	18
2. 비전 및 목표	19
3. 5년 후 주요 전망	20
4. 제7차 기본계획 구조 및 특징	21
V. 정책 과제	22
1.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	23
2.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	38
3.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	54
4. 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 강화	67
5.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	73
VI. 과제별 소관기관	80

I . 수립 배경 및 경과

1

수립 배경
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3조 및 제15조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「청소년정책 기본계획」을 5년마다 수립
 - * 제1차 기본계획('93~'97), 제6차 기본계획('18~'22) 등
- 그동안의 청소년정책 추진 성과를 기반으로 최근 사회환경 변화, 새로운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하여 「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」(23~27) 수립 필요

◆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3조(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)

-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2

추진 경과

- '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' 실시('22.4~12)
 - 분과별 TF 구성·운영 통해 과제 발굴, 간담회·토론회·서면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진행
- 청소년정책 분야별 주요 대책 및 계획 등 수립·발표('22.6~12)
 - * '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'('22.6), '학교안팎 청소년 지원강화대책'('22.10), '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방안'('22.11), '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'('22.12)
-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(안) 초안 마련 및 관계기관 1차 의견 수렴('22.12)
- 기본계획 수립 관련 공청회 개최('22.12.23)
-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 대상 추가 의견수렴('23.1)
-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·의결, 「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」 발표('23.2)

II . 청소년정책 환경

1

청소년정책 환경

1

청소년의 특성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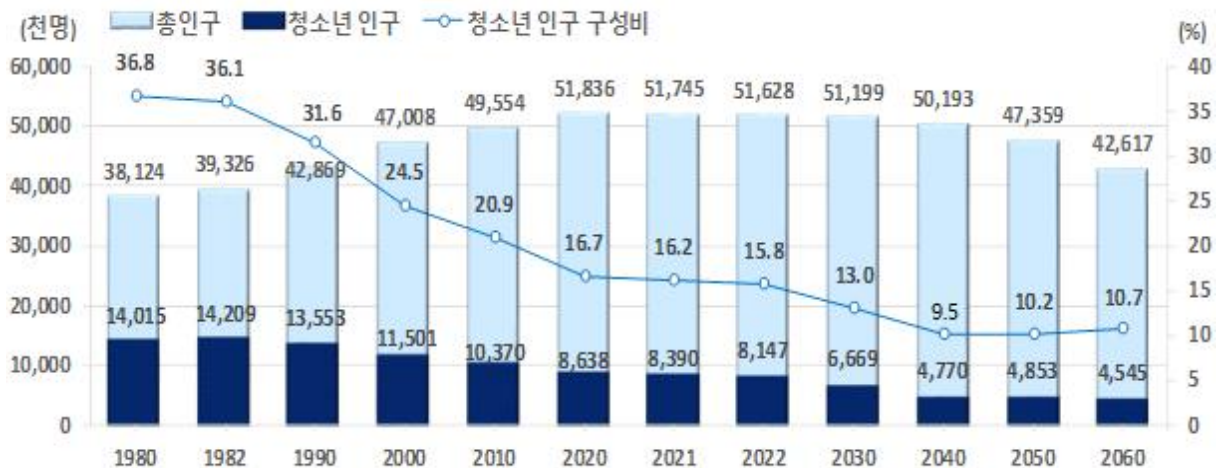
◆ 청소년 인구 규모 감소와 함께 청소년 특성이 변화

□ [청소년 인구] 청소년 수는 지속 감소, 위기청소년은 증가 추세

- (인구 규모) 우리사회는 2000년대 이후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하였으며, 이로 인한 청소년 인구 규모 급감 추세

* 전체 인구 대비 청소년 비중 감소: (1980년) 36.8% → (2022년) 15.8%

- 총 인구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감소하여 '60년에는 청소년 비중이 10% 정도에(10.7%) 불과할 것으로 전망



- (특성별 규모 변화) 전체 청소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, 위기유형별 청소년 규모 증가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위기·취약 청소년 발생

- 가정 밖·학교 밖 청소년은 코로나19로 인해 '20년에 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, 다문화 청소년은 규모와 비중 모두 지속 증가 추세

* 가정 밖 청소년(9-19세, 가출신고 기준) : ('18년) 24,384명 → ('21년) 23,133명 → ('22년) 28,643명
 다문화 학생(전체 대비 비율) : ('17년) 109,387명(1.9%) → ('21년) 160,058명(3.0%) → ('22년) 168,645명(3.2%)

- 은둔형 청소년, 가족돌봄청(소)년(영케어러, young-carer) 등 기존 유형을 벗어난 새로운 위기·취약 청소년이 대두

⇒ **청소년 인구 규모 감소로 청소년 개개인의 역량 제고 중요**
 ⇒ **새로운 유형의 위기·취약 청소년 발생으로 복지·지원정책 수요 확대**

□ **[청소년 활동] 디지털 친화도가 높고 활동 수요는 다양**

- (디지털 친화) 현 청소년 세대는 디지털과 함께 성장하여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세대*이며, 관련 온라인 활동 및 기기 활용에도 능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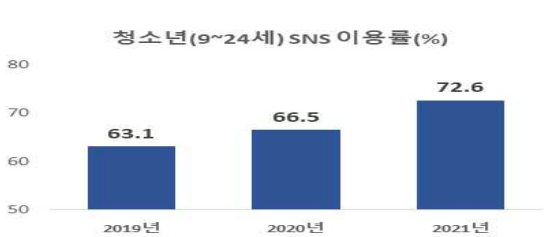
* 디지털 네이티브(Digital Native) : 디지털 활용 환경에서 성장하여 일상생활 전반에서 디지털 및 온라인을 활용하고, 관련 기기 사용에도 능숙한 세대

- 디지털 환경 상 신속한 반응·소통을 추구하며, 온라인·SNS 등을 통한 소통·협업, 공통관심사 공유 등을 중시하는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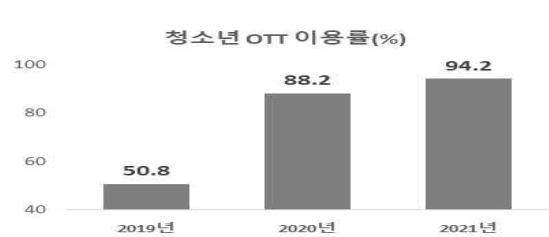
【 디지털 환경 속 청소년의 소통방식 변화 】

기존 소통방식	디지털 환경 속 소통방식
한정된 분야, 제한된 시·공간, 제한된 참여	다양한 분야, 시공간적 유연성, 누구나 참여

- 청소년들의 디지털 매체 이용 및 활용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, 관련 교육 등에 대한 수요 증가



* 세대별 SNS 이용현황(정보통신정책연구원, 2022)



* 세대별 OTT 서비스 이용현황(정보통신정책연구원, 2022)

- * 청소년의 SNS 이용시간은 주중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이 15% 상회

- (수요 다양화) 청소년의 수요가 다양화되어 여러 분야에의 활동 참여를 희망

- 분야별로는 문화·예술, 모험·개척 등에 대한 수요가 높고 디지털 확산 등에 따라 과학·정보 관련 분야 관심이 지속 높아지는 상황

* 청소년 희망 활동 : 문화/예술 35.7% ▶ 모험/개척 12.3% ▶ 직업/진로 10.8% 순
 과학·정보 : ('14년) 7.5% → ('17년) 8.3% → ('20년) 9.1% (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)

- 또한 청소년이 이전보다 개인 능력에 대한 가치를 높게 두고 있어 개인 역량제고 및 관련 활동에의 관심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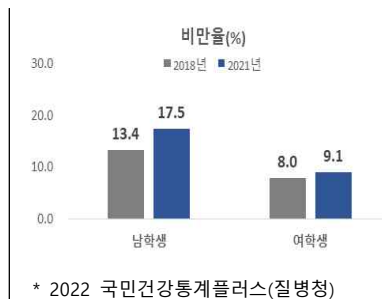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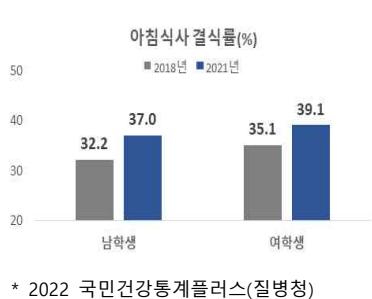
* 청소년의 직업선택기준은 자신의 능력(37.8%), 적성(16.8%) 순으로 2017년 대비 자신의 능력에 대한 비중이 크게 증가(30.4%→37.8%) (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)

⇒ **청소년의 디지털 친화 특성과 수요 다양화에 따라 활동프로그램 개선 필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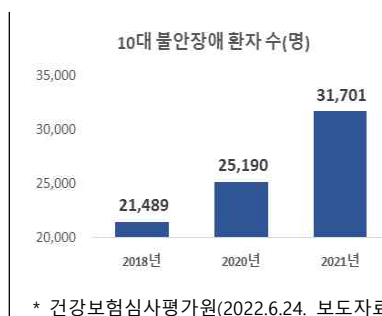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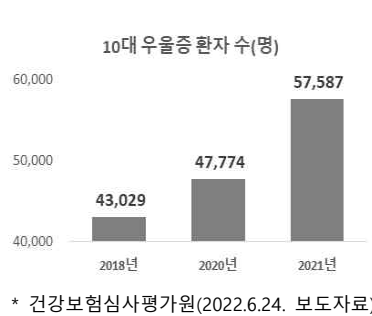
□ **[청소년 건강] 최근 청소년의 심신 건강 변화 발생**

- (신체적 건강) 청소년의 신체 건강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나빠진 상황

- 아침식사 결식률 및 비만율이 이전 대비 증가하였으며, 비대면 환경 확산 등으로 신체활동 시간은 감소



- (정신·정서적 건강) 코로나19 이후 우울증 진료, 불안장애 등 청소년의 정신·정서적 문제 증가



⇒ **청소년의 신체 건강 향상과 함께 정서·심리 문제 심화로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기 개입 및 지원 필요**

□ [청소년 근로] 근로청소년 부당처우 등 보호 사각지대 잔존 근로형태는 다양화

- (근로청소년 처우) 청소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*,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행위 역시 지속되고 있는 상황

* 청소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: ('17년) 64.5% → ('20년) 71.6% (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)

- (근로형태 다양화) 최근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통상적인 근로형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근로형태(Gig Worker 등)*가 확산

- 청소년 또한 다양화된 근로시장에 진입하여 활동 중

* (Gig Worker) 플랫폼을 주요 기반으로 하여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가일회성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

⇒ 청소년이 공정한 근로여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

2 청소년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

◆ 다양한 사회변화로 청소년이 직면한 기회와 위기 모두 증가

□ [기술발전] 디지털 활용이 확대되는 동시에 이를 통한 유해요인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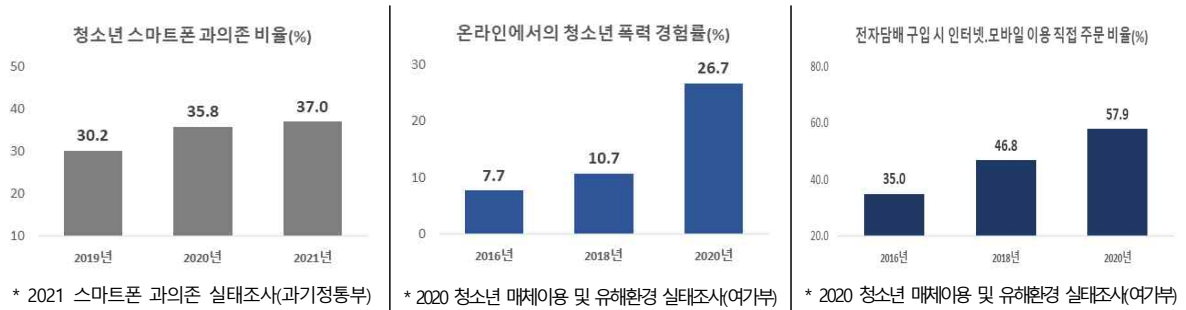
- (디지털 확산) 신기술 발전,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사회 전반에 디지털 중심 문화가 크게 확산

- 디지털 확산은 산업구조와 일자리 구조를 다양화하고, 일상생활 속 블록체인·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시키는 변화 야기

- (디지털 활용 증대) 일상생활부터 교육, 소통 등 삶 전반에서 디지털 활용도가 높아져 디지털 리터러시*, 디지털 윤리의 중요성 증대

* 디지털 환경에서 각각의 정보 형태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 문해능력

- (디지털 확산 부작용) 디지털 매체 환경이 확산됨에 따라, 디지털 이용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미디어 과의존 등 부작용 및 유해환경 노출 또한 증가



- ⇒ 디지털을 활용한 정책인프라 고도화 및 관련 역량·인식 제고 필요
- ⇒ 디지털을 매개로 한 유해요인 확산 등 부작용 해소 기반 마련 필요

□ [코로나19 영향]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삶의 방식과 사회 전반 변화 발생

- (비대면 활성화) 코로나19로 확산된 비대면 수요·활용도 증가로 대면 서비스의 비대면 전환 증가

* 청소년 행사 및 수련시설 활동 프로그램 또한 비대면으로 개최·진행

- (일자리 위기 등 발생)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·경제 충격이 청소년에게도 큰 타격*, 거리두기 영향으로 소외되는 청소년 등 문제 발생

* 근로청소년의 40% 이상이 서비스업에 종사(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)

- 아울러 등교 중단, 비대면 원격교육 확대 등으로 청소년 간 학습 격차·디지털 격차 야기*

* 초·중·고 모두 가정경제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'온라인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그냥 넘어간 학생의 비율'이 높게 나타남(한국의 사회동향 2021, 통계청)

- ⇒ 청소년정책 추진 시 대면과 비대면 방식 병행 추진 필요
- ⇒ 심화된 위기·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

[참고] 해외 청소년정책 동향

□ 유럽연합(EU)

○ 「2019~2027년 EU 청소년 전략」(EU Youth Strategy 2019-2027) 채택('18)

- 청소년의 사회 참여와 시민으로서의 참여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에 초점

핵심 영역	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
참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새로운 'EU Youth Dialogue' 개시 • 'European Youth Portal' 통합으로 단일한 접근채널 제공
연계, 교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유럽 청소년 단체간 협력을 촉진하여 보다 강력한 파트너십 수립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운영 • 서로 다른 지역의 청소년 간 네트워크 수립을 지원하는 'Erasmus+ Virtual Exchanges' 및 'Erasmus+' 프로그램 하에서 추진되는 여러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등 • 국제 자원봉사 프로그램 'European Solidarity Corps' 시행 지원
권한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소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'European Youth Work Agenda' 시행 협력 등

□ 프랑스

○ 「청소년 기본계획(Politique en faveur de la Jeunesse)」 발표(2013, 2015, 2020, 2022, 교육청소년·스포츠부)

		세부과제 및 중점과제
참여 등 활성화	참여	국가차원의 서비스 연계 과정 확립, 사회적 다양성에 기초를 둔 참여문화 조성, 청소년 참여 인식 및 시민성 교육 지원 등
	국제교류	해외 프랑스령 청소년의 이동 어려움 해결, 25세 이전 유럽연합 국가 최소 6개월 체류 권장, 청소년 국제활동 참여 활성화 등
교육 및 진로	교육	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복귀를 위한 교육구조 개발, 직업교육 및 이수를 위한 신개념 캠퍼스 개발, 공화주의 가치와 비종교주의 실천 등
	진로설정 및 정보	청소년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관련 정보(교육, 실업교육, 장학금 및 보조금, 구직, 외국체류 등) 접근성 제고, 청소년 권리와 청소년 서비스 확장 등
일자리, 취업		1인 청소년 1개 솔루션 사업 추진, 용이한 구직을 위한 청소년의 능력 개발, 저학력 청소년의 구직활동을 위한 '청소년 보장법' 개발 등
자립과 불평등 해소		1인 청소년 1인 멘토 사업 확장,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개선, 청소년 문화패스 활성화, 휴가권 보장하기, 스포츠 장치마련 및 활용 개선 등
삶의 질 개선		정보·개발·주거 발전법에 따라 청소년의 용이한 주거진입 보장, 청소년 건강보험 절차 간소화, 청소년 건강위해요인 예방(알코올, 담배, 마약, 인터넷) 등

□ 호주

○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이슈에 대해 청소년을 지원하겠다는 국가적 서약의 일환으로 「호주 청소년정책 프레임워크(Australia's Youth Policy Framework)」 발표('21.8)

목표	주요 내용
코로나19의 영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코로나19가 청소년들에게 끼친 부정적인 영향(사회경제적 영향 및 정신건강 이슈 등)과 청소년정책 분야의 주요 목표 설정
청소년정책에 청소년 의견 반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소년 대상 컨설팅을 통해 청소년정책 우선과제·영역 설정 • 청소년옹호단체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듣기 위한 프로그램 등
청소년 이슈 청취대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육, 훈련, 고용 관련 기회 제공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투자
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부의 청소년 서비스 간 연계 강화 •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여러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
청소년-정부 간 협력 지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효성 있는 조치들로 호주 청소년 지원 • 정기적인 컨설팅을 통한 청소년 의견수렴 방침 서약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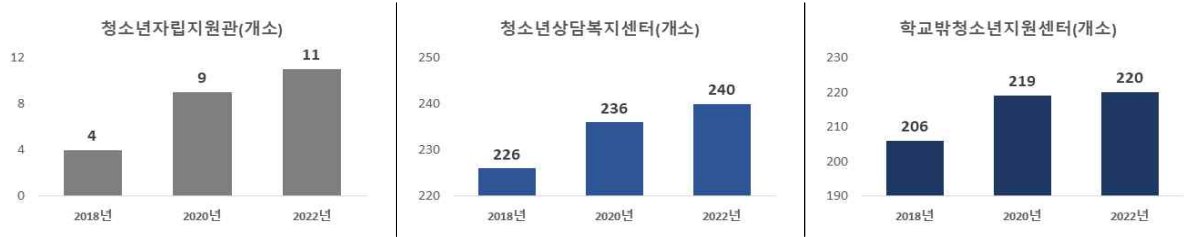
Ⅲ. 제6차 기본계획 평가

◆ (활동) 다양하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 기반 마련

- 진로맞춤형·역량개발 체험활동과 방과후아카데미 연계 강화
 - * '창의융합인재양성 프로그램'을 적용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신규모델 개발·운영('18년 10개소)
- 한·아세안 청소년 서밋 개최 및 세계잼버리 개최 추진* 등 다양한 글로벌 중심 활동 활성화
 - * 「세계잼버리 지원 특별법」 제정 및 「세계잼버리 종합추진계획」 마련('18.12) 등
- 수련시설 대상 전문 안전점검 실시 및 관련 시스템 개발로* 안전한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, 활동인프라 확대**로 청소년의 활동 접근성 제고 노력
 - * 청소년수련시설 안전·운영 종합시스템 개발 추진(~'22년)
 - ** 생활권 활동시설 확대 : ('17년) 453개소→('19년) 491개소→('21년) 523개소 / 전문화·특성화된 국립청소년활동시설 건립 추진(미래환경센터(경북 봉화, '22.7 개원), 생태센터(부산 사하, '23 준공예정))
- 청소년시설과 학교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발표* 및 지자체, 교육청과의 MOU 체결 등 협업체계 구축
 - * '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' 수립·발표('22.10.6)

◆ (복지)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

- 관계부처 합동 「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」 마련('19.5),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신규 도입·확대*로 정책 협업체계 강화
 - * 위기청소년 발굴·관리 및 고위기 사례관리('19년 5개소 시범 → '20년 9개소 → '22년 20개소)
-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·실태파악 제도 마련·확대*, 보호·지원 기관 등 인프라 확충 등 정책 접근성 제고
 - * 거리상담(아웃리치) 전문요원 배치 확대('18년 60명 → '20년 115명),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 최초 실시('22.4 결과 발표) 등
- 쉼터퇴소 청소년 주거지원 근거 마련 및 자립지원수당 지급(21~) 등 자립기반 확대
 - * 쉼터퇴소 청소년들이 청년임대주택에 우선 입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(19.7 개정, '19.10 시행)



* 여성가족부 통계

- 학교 밖 청소년 무료급식 지원, 청소년생활기록부 도입, 전용공간 조성 등 서비스 확대로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등 증가



* 여성가족부 통계

-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」 수립·발표('22.12)
-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건강 악화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종합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「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」 마련·발표('22.11)

◆ (보호)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 및 치유인프라 확충

- 청소년 보호법 이행여부 및 청소년 유해성 사이트(랜덤채팅, 유해업소 광고 등) 점검, 시정·차단요청 등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 노력
-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발굴 및 치유지원 강화*,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을 통해 보호처분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·회복지원 내실화
 - *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(129만여 명 대상) 및 위험군 대상 치유캠프 등 진행
 - ** 부산, 경남, 경기, 광주, 대전, 울산, 제주 등 18개소('22.11 기준)
- 청소년 보호·재활 시설 인프라 확충* 및 치유 영역 확대**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서비스의 실효적 제공 기틀 마련
 - * 국립청소년디딤센터 확충 : ('21년) 1개소(중앙) → ('22년) 2개소(중앙, 대구)
 - ** (드림마을) 사이버도박 중독 치유프로그램/ (디딤센터) 약물 중독 치유 프로그램 시범운영

◆ (참여권리) 지역단위 청소년 참여 기반 확대 및 권익증진 제고

-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('18.12)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토록 하여 참여권 보장 확대
-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을 확대하고, 신규 참여모델 발굴·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활성화 사업 운영 등 지역 단위 참여활동기반 내실화
 - *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수 : ('18년) 188개 → ('22년) 233개
- 온라인 참여기반 확대*로 시·공간 제약 없는 참여 지원
 - * 청소년참여포털(youth.go.kr/ywith) 운영 등
-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* 및 전자바우처 도입('19년~) 등 통해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강화
 - * ('21년)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만 11~18세 → ('22년)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만 9~24세

◆ (추진기반)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및 지역중심 전달체계 확대

- 정부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으로 주요 청소년정책의 심의·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
 - * 위원장(여가부 장관), 정부위원(관계부처 차관급 13명), 민간위원(청소년 포함 13명)
- 지자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확대*하고, '청소년정책 분석·평가' 대상을 전체 지자체로 확대·개편하여 지역중심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조성
 - *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(청소년지도사 또는 상담사 자격 소지자) : ('18년) 94명 → ('21년) 139명
- 청소년데이터맵* 구축, 청소년사업 디지털전환 교육과정 개발 등 청소년정책·사업의 디지털화 추진
 - * 공공데이터포털, 통계청, 지방자치단체 등 46곳에서 개방 중인 청소년 분야 데이터를 전수 조사하여, 408종 발굴('22년~)

2

한계 및 향후 과제

- (활동) 청소년의 학업·진로 부담과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청소년의 활동 참여에 한계, 디지털 일상화를 반영한 정책 필요성 제기
 - 청소년 인구 수 감소와 함께 활동 프로그램과 학교와의 연계 또한 미흡하여 학업·진로 부담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활동 참여에 한계
 - 또한 코로나19 영향과 비대면 수요 증가까지 더해져 청소년 활동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수요·이용 감소
 - 원격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, 디지털 환경의 일상화로 청소년 활동 전반의 디지털화 및 이에 적응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제고 필요성 확대

⇒ 청소년활동과 학교 간 연계를 강화하여 수요 확보 및 질적 제고

⇒ 비대면 수요,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에 따라 디지털 관련 지원 확대

- (복지) 가정 밖·학교 밖 등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이 지속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와 대상 간 지원 격차가 잔존, 새로운 지원수요도 발생
 - 자립지원수당 등 지원정책 수준에서 여전히 부처별 소관 유사 복지 정책대상 간 지원 편차 발생
 - 고등학교 단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연계제도 미흡 및 학업중단 시 정보 부족* 등 문제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 발생
 - *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둘 당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비율은 41.8%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(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)
 - 은둔형 등 새로운 유형의 위기 청소년이 증가하고 후기 청소년 등 기존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었던 대상도 재조명되는 등 지원 수요 확대

⇒ 실질적 보호·자립을 위해 정책대상 간 지원 수준 격차 해소

⇒ 사각지대와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두터운 지원망 구축

□ (보호) 디지털을 매개로 한 유해요인 증가, 근로시장 변화 등 청소년이 새로운 환경에 직면함에 따라 적극적 대응 필요성 대두

○ 온라인을 통한 유해광고물 노출, 사이버 폭력 등 디지털을 매개로 한 청소년 유해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, 관련 범죄 또한 증가

* 온라인 폭력 : ('18년) 10.7% → ('20년) 26.7% / 온라인 성폭력 : ('18년) 17.1% → ('20년) 44.7%
(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)

○ 마약, 도박 등 기존 성인 중심 대상이었던 유해행위·요소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

○ 플랫폼 노동 등 근로형태 다양화로 청소년의 노동시장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새로운 보호체계 마련 필요성 제기

⇒ **디지털을 매개로 한 유해요인·행위 차단과 피해지원 확대**

⇒ **근로형태 다양화에 따른 근로청소년 보호 정책체계 강화**

□ (참여·권리) 청소년 참여의 양적·질적 제고를 위한 참여기구 운영 개선 및 역량 제고 등 요구가 확대되고, 청소년의 다양한 권리보장 이슈 제기

○ 청소년 참여활동이 '청소년참여기구'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역 사회 연계 등 통해 청소년 참여를 확산해 나갈 필요

○ 청소년 참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참여 역량 제고 필요성 제기 및 청소년의 건강권 등 권리 이슈 관심 확대

⇒ **일상에서의 참여 등 참여 기회를 다양화하고 참여역량 제고 지원**

⇒ **청소년 권리보장을 통해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 지원**

□ (추진기반) 정책 인프라 개선 및 현장 기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,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고 지역사회 연계 부족으로 정책 체감도 또한 낮은 상황

○ 청소년정책 관련 인프라, 자원 확보 등 기반 부족 문제 지속 제기

○ 청소년정책이 실제로 작동되는 지역 차원에서 정책에 대한 낮은 관심도, 협업 부족 등으로 현장 체감도 제고에 한계

⇒ **정책 제도·자원·인력 등 정책 추진기반 개선**

⇒ **지역 내 청소년정책 확산과 내실있는 작동 위한 협업 강화**

[참고] 현장 의견수렴 주요내용

① 청소년

- ▶ (활동) 진로체험처 확대·다양화 등 진로지원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, 환경문제 등 청소년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청소년의 주도적 의견 개선, 활동 등 요구
- ▶ (복지) 최근 확대되고 있는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 필요, 학교 내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필요
- ▶ (보호) 아르바이트 시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보호 요구, 온라인 상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
- ▶ (참여)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및 정책 실현을 위한 지원 필요, 청소년 참여기구 간 소통방안 마련 필요 등

② 유관기관 및 단체

- ▶ (활동) 정책수요자의 요구(진로 수요 등)를 반영한 활동 지원 필요, 기후변화 등 사회 환경을 고려한 정책 접근 요구, 청소년활동과 학교·교육과의 연계 강화
- ▶ (복지) 청소년안전망 공공성 강화 필요,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보호방안 마련 및 대상별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고민
- ▶ (보호) 청소년 성범죄 관련 보호지원 안전망 구축 마련 필요
- ▶ (기반) 청소년정책 추진 강화를 위한 재원확충 등 고민,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및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정책 연계, 정책 전달체계 관련하여 관련 청소년 시설·센터 간 연계, 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

③ 학계 및 전문가 등

- ▶ (활동)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과의 연계 및 접점 모색 필요, 청소년활동 이력관리 등 활동관리체계 요구
- ▶ (복지) 새로운 유형의 정책대상자에 대한 지원망 구축 필요, 쉼터퇴소 청소년과 후기청소년 등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요구
- ▶ (보호) 청소년 마약문제 관련 정책 고민 필요, 디지털/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한 청소년 환경 보장 필요
- ▶ (참여) 청소년 활동 및 시설운영 등 관련하여 청소년 참여보장 필요, 청소년 참여활동 다양화 필요
- ▶ (기반) 정책 추진 인프라로서 인력/재원 등 확보 강화 필요, 유관부처 간 정책 네트워크 및 연계 강화 필요, 지역사회와의 연계 필요

IV. 추진 방향

-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플랫폼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
 - 청소년의 수요 다양화와 디지털 역량 중요성 확대에 따라 관련 청소년 역량 제고와 활동을 적극 확대하고, 청소년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학교 안팎 연계 강화
-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촘촘히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지원망 구축
 - 청소년의 새로운 위기 심화와 복지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,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존 정책대상 지원은 더욱 촘촘하게 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로운 위기 유형 발굴 및 지원 추진
- 증가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강화
 - 디지털 환경 확산에 따라 유해환경 접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다양한 유해환경과 행위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, 근로형태 다양화에 따른 보호 내실화
- 청소년이 건강하고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·권리 보장 강화
 -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를 위해 다양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권리 보장 강화
- 청소년정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총괄·조정 기능 내실화
 - 청소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정책 인프라를 개선하고 현장감 제고를 위한 지역 맞춤형 청소년정책 활성화

2

비전 및 목표

비전

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-청소년

목표

청소년 성장기회 제공

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

정 책 과 제	대과제(5개)	중과제(14개)
	①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	1-1. 청소년 디지털역량 활동 강화 1-2. 청소년 미래역량 제고 1-3.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 1-4. 학교안팎 청소년활동 지원 강화
	②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	2-1. 위기청소년 복지지원체계 강화 2-2.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2-3.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
	③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	3-1. 청소년이 안전한 온·오프라인 환경 조성 3-2.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회복 지원 3-3. 청소년 근로보호 강화
	④ 청소년의 참여·권리 보장 강화	4-1. 청소년 참여 활동 강화 4-2. 청소년 권익 증진
	⑤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	5-1. 청소년정책 인프라 개선 5-2. 지역 맞춤형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구축

3

5년 후 주요 전망

성과지표		현재('20~'22)	목표치('27)	출처
총괄	삶의 만족도	6.59점 (2020)	7.2점	청소년종합실태조사 (3년 주기)
활동	청소년 단체활동 참여율	34.7% (2021)	50%	통계청 사회조사 (홀수년도)
	인증프로그램 참여청소년 수	195,339명 (2022)	529,743명	여성가족부 자체조사
복지	청소년안전망 지원 서비스 건수	410만 건 (2022)	482만 건	여성가족부 자체조사
	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의 자립률	47.9% (2022)	48.9%	여성가족부 자체조사
	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	43.8% (2022)	44.3%	여성가족부 자체조사
보호	스마트폰 과의존율	37.0% (2021)	28.0%	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(과기정통부)
참여· 권리	청소년 참여 보장 인식 수준	72.6% (2021)	84.6%	아동·청소년 인권 실태조사

□ 기본계획의 구조

- 「청소년 성장기회 제공」, 「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」의 2대 목표 설정
 - 「청소년기본법」상 ‘기본이념’에 따른 4개 분야와 정책기반을 포함한 총 5개 분야 기준으로 5개 대과제, 14개 중과제, 39개 소과제 및 108개 세과제로 구성

◆ 제2조(기본이념) ① 이 법은 청소년이

①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(복지) 아울러

②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(활동)

③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(보호)

④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(참여권리)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
□ 기본계획의 특징

◆ 다양한 청소년 목소리와 급변하고 있는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과제 발굴 및 강화에 중점

-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소년 특성과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청소년 디지털 관련 활동 기반 확대 및 역량 제고를 위한 과제 확대
- 학교 밖, 가정 밖 등 유형별 청소년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, 신 소외 대상 발굴 등 정책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지원 과제 추진
- 디지털 매체 유해환경·사이버 폭력, 도박·마약류 문제 등 최근 이슈되고 있는 유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
- 청소년 참여활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참여 역량 강화, 참여기구 간 교류 활성화 등 참여활동 지원체계 강화
- 청소년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, 지자체, 교육청 등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한 과제 추진

V . 정책 과제

1-1. 청소년 디지털역량 활동 강화

- ① 디지털 활동 및 교육 지원
- ②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디지털 기반 개선

1-2. 청소년 미래역량 제고

- ① 미래역량 제고 활동 확대
- ② 진로체험 및 교육 지원

1-3.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

- ① 테마별 활동기회 제공
- ② 자기주도적 활동 프로그램 확대
- ③ 안전한 청소년활동 기반 마련

1-4. 학교안팎 청소년활동 지원 강화

- ① 학교 연계 청소년활동 지원
- ② 지역사회 연계 학교안팎 청소년활동 강화

1-1. 청소년 디지털역량 활동 강화

- ◆ 청소년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활동 프로그램 확대 및 교육 강화
- ◆ 청소년활동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활동 지원체계의 디지털 고도화

1] 디지털 활동 및 교육 지원

□ 디지털 기반 활동 기회 확대(여가부, 과기정통부)

- 청소년 디지털 역량* 향상을 위해 디지털 청소년활동 모형을 개발하고, 관련 활동 콘텐츠 개발·제공
 - * (예시) ①디지털 도구 활용, ②디지털 콘텐츠 관리, ③디지털 정보 활용, ④디지털 일상 관리
- 청소년 수련시설 등 통해 코딩, 드론체험, VR·AR 등 디지털 관련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확대 운영
 - * 지역 산업계 등과 협업하여 디지털 관련 소양·활동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등
- 한국코드페어 개최*를 통해 청소년들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및 경험 기회 제공
 - * 소프트웨어 활용 문제해결 공모전, 해커톤, 소프트웨어 공부방 등의 프로그램 운영('19년~)

□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활성화(교육부, 과기정통부)

- 공교육을 통한 디지털 교육 기반 마련 위해 단위학교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지원
 - * ('22년 교육과정) 디지털 역량 함양 강조, 정보시수 2배 확대 등('22년 고시, '24년~ 적용)
- 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디지털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탐구·체험 중심의 코딩교육 제공 및 고교 선택과목 다양화*
 - * ('22년 교육과정) '정보', '인공지능 기초', '데이터과학', '소프트웨어와 생활' 등 과목 확대

- 초·중등 SW·AI 분야 핵심 인재를 조기 발굴·육성할 수 있는 SW 영재학급 확대* 운영
 - * ('23년) 45개 → ('25년) 70개 목표
- 영재학교·과학고 등 대상 SW·AI 분야 특화교육과정(인공지능, 머신러닝, 데이터과학 등) 운영
 - * 필요 시 일반고 학생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영재학교·과학고의 SW·AI 심화과정을 온·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제공
- 특성화고, 마이스터고 등의 디지털 특화·역량 교육 확대
 - * 특성화고 SWAI분야 학과 개편 등 교육 기반 마련 및 마이스터고 대상 SW실습 인프라 지원 등
- 실생활 주제 중심 STEAM 교육 활성화를 위한 융합형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, 대학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디지털 분야 방과후 수업 운영

□ 디지털 교육 사각지대 해소(과기정통부, 교육부)

- 정보소외지역 초·중등생 소프트웨어(SW)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'SW미래채움센터'('22년 11개소) 확대·운영
 - * 지역별 SW 교육장·체험공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SW 체험캠프,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, 지역 SW 교육 페스티벌 등 운영
- 디지털 교육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초등학교에 정보교육 보조강사(디지털 튜터)를 배치·운영

□ 디지털·미디어 문해력(Literacy) 함양(교육부, 과기정통부, 문체부, 방통위)

- 청소년과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·미디어 교육 제공
 - 학생·학부모·교사 대상 소통·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, 청소년, 양육자(보호자) 특성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·보급 및 교육 운영
 -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디지털·미디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및 미디어나눔버스 운영

- 학교 및 청소년 대상 디지털·미디어 교수·학습 지원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플랫폼(미리네, 미디온) 운영
-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주간 캠페인, 스마트 씬 문화운동 등 건전한 인터넷·미디어 이용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

□ 디지털 윤리규범 확산·실천(과기정통부, 방통위, 문체부, 여가부, 각 부처)

- 청소년을 위한 메타버스 윤리원칙 실천 교육 및 홍보 강화
 -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메타버스 윤리원칙 홍보 강화를 위해 아동·청소년용 홍보물 개발·확산(부처 합동)
 - 초·중등학교 찾아가는 실감교육 과정에 ‘메타버스 윤리원칙’ 강의 편성 및 보급·확산(부처 합동)
- 메타버스 개발자·운영자·이용(창작)자 등 영역별 이해하기 쉽고 활용하기 편리한 실천 윤리지침서 개발(부처 합동)
 - * 세부 개발계획, 부처별 역할 등은 ‘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TF’ 통해 조정
-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및 사업자의 자율적 이용자 보호 이행 등을 위한 ‘(가칭)메타버스 디지털 공동체 발전방안’ 마련
- 청소년에게 디지털 저작권 인식 교육 강화
 - 디지털 분야 저작권 문제 관련 청소년의 인식제고를 위해 초·중등생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및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
 - *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내용에 청소년이 직면할 수 있는 저작권 사례 등 포함하여 교육 진행
 - 학교 밖 청소년, 컴퓨터 청소년 등 대상 디지털 저작권 교육을 지원하고, 청소년 시설을 활용한 디지털 저작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

②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디지털 기반 개선

□ 청소년활동 데이터 관리·활용 지원(여가부, 지자체)

- 청소년활동 관련 데이터 집적·분석·활용을 위해 청소년활동 데이터 디지털 전환 및 표준화* 추진
 - 표준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소년활동 이력 등 축적된 데이터를 개인 맞춤형 활동 프로그램 개발·추천 등에 활용
 - * 청소년활동 데이터 표준 형식 개발 및 데이터 수집방법 절차 등 체계화한 운영지침 마련 등
- 청소년관련 시설·기관·단체 및 지자체 등이 보유한 청소년 관련 종합 정보의 집적·활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

□ 청소년활동 디지털 플랫폼 구축(여가부)

- 청소년 개인의 역량·특성에 따른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검색·제시 및 피드백 등이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
 - 청소년활동 관련 빅데이터 생산 및 관리, 청소년 관련 시설·기관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및 편의·부가기능 구현*
 - * 수요자 관점을 반영한 예약·결제·평가 등 편의기능, 학교 제출서류 제공 부가기능 등

□ 디지털 청소년활동 공간 구축(여가부)

-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활동공간 구축*
 - 구축된 디지털 활동공간을 활용하여 학교, 지역사회 등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및 활동 서비스 제공
 - * 시설별 여건에 따라 디지털 공간 및 관련 설비 구축 추진

1-2. 청소년 미래역량 제고

- ◆ 신산업, 환경, 경제 교육 등 미래세대로서 필요한 소양 함양 지원
- ◆ 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진로 교육 및 분야별 진로 활동 확대

1 미래역량 제고 활동 확대

□ 청소년활동 역량지표 개선 및 커리큘럼 개발(여가부)

- 교육과정 개정 등 반영하여 청소년활동 전반에 활용되는 활동 역량지표를 개편(디지털 분야 추가 등)하고, 지표를 보급하여 프로그램 개발 시 활용
 - *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6대 청소년활동 역량지표('18) : 비판적 사고, 의사소통, 협업, 창의력, 사회정서, 진로개발역량
 - *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: 자기관리, 지식정보처리, 창의적 사고, 심미적 감성, 협력적 소통, 공동체
- 청소년 성장단계별로*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주제 설정 등 청소년 활동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
 - * 9~12세(초기), 13~15세(중초기), 16~18세(중후기), 19~24세(후기)

□ 신기술·신산업 및 환경 분야 청소년활동 지원(과기정통부, 해수부, 환경부, 여가부, 지자체)

- 청소년의 과학 관심·흥미도 향상을 위해 일상에서의 체험과 탐구 활동을 촉진하고, 첨단연구·산업 현장 방문 기회 확대
 - * 생활과학교실(초등생 방과후 과학체험교실), 청소년과학대중맞춤형 첨단 산업기술 현장 방문 프로그램 등
- 해양·극지 관련 청소년 교육을 위해 청소년 북극연구체험단* 운영 및 찾아가는 해양교육, 극지연구기관 견학 프로그램 등 지원
 - * 북극다산과학기지 등 북극 연구현장 및 생태 견학 프로그램
-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 관련 청소년 교육 및 일상 속 실천활동을 지원하고, 청소년지도사의 환경 문제 관련 전문성 제고 지원
 - * 청소년 수련시설과 환경 관련기관 연계를 통해 환경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제공 등

□ 금융·경제 분야 청소년 교육 실시(금융위, 기재부, 교육부, 여가부)

-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금융·경제 교육 프로그램 지원
 - 청소년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체험형 금융교육 실시 및 방과후 수업 등을 활용한 대면교육 활성화
 - 청소년 등 수요자 맞춤형 경제교육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
 - * 우수 경제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'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' 구축(~'23년)
- 학교에서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경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
 - 경제·금융 교육 관련 연구학교 운영을 통하여 학생 실생활과 연계한 경제·금융 교육 모델 공유 및 확산
- 쉼터 청소년, 학교 밖 청소년 등 대상 경제·금융 교육 지원
 - * 에듀넷·티-클리어 등 관련 플랫폼 내 경제·금융 교육콘텐츠 등 활용
- 청소년지도자 경제분야 역량강화 위한 연수과정 개발 및 인력풀 운영

② 진로체험 및 교육 지원

□ 전문 분야별 진로탐색 활동 지원(과기정통부, 해수부, 농림부, 산림청)

-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를 통한 과학기술분야 청소년 진로지원 강화
 - 성장단계별 진로체험 프로그램 및 진로 컨설팅을 강화하고, 진로 지원 가이드라인 활용 촉진
- 현장 답사 및 강좌 등 체험 중심의 전 주기* 해양체험·진로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
 - * (초·중등) 지역교원·전문가의 온·오프라인 강좌 제공(오픈강좌)
(중·고등) 해양 수산업 현장 체험 및 심화 탐구학습, 진로연계형 멘토링
(대학) 해양정책 특강 운영, 해양문화현장 답사 등

- 농촌지역 인재양성 및 청소년 진로지원 위한 특화프로그램* 개발·운영
 - * 농업 전망에 대한 이해와 체험 프로그램 기획, 선진농업 체험프로그램 운영, 첨단 기술 활용 교육(드론활용, 스마트팜 등), 농업 관련 취·창업 역량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등
- 산림(숲)을 통한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탐색 및 체험기회 제공
 - * 자유학기제 전문 숲교육프로그램 '큰그린 학교' 운영(국립수목원 등 68개 기관)

□ 진로체험기관 간 협업 통한 체험기회 확대(여가부, 교육부, 지자체)

-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학교 및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 운영
-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* 등 통해 다양한 청소년 진로체험 제공 기관 확대를 유도**하고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 제공
 - *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기부 방식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('16년~)
 - ** 진로체험지원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(꿈드림센터)의 협업을 통해 신규 인증기관 적극 발굴
- 지역별 특화 사업을 중심으로 경제단체, 기업 등과 협업하여 현장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추진

□ 청소년 진로 정보제공 및 교육 강화(교육부)

- 청소년 개인 적성·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상담 운영 및 진로 체험정보제공 시스템('꿈길')을 통해 진로체험 관련 정보 상시 제공
- 학교 내 진로관련 과목 및 교과연계 진로교육 등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·계획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
 - * 자유학기제를 연계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

1-3.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

- ◆ 국제교류, 문화·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체험기회 활성화
- ◆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·주도하는 활동 지원
- ◆ 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시스템 운영 및 평가·교육 활성화

1 테마별 활동기회 제공

□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(여가부, 외교부, 환경부)

- 세계 청소년과의 문화교류 등 글로벌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2023 새만금 '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' 개최
- 기후변화 등 관련 청소년 국제 논의 및 활동 지원을 위한 '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', '한·중·일 환경장관회의(TEMM) 청년포럼' 등 개최
- '한-아세안 청소년 서밋'을 '국제 청소년 서밋'으로 확대
- 메타버스를 활용한 대면-비대면 융합형 등 국제교류 방식 다양화
- 청소년 국제 교류 현황 정보를 청소년 시설 등에 제공 및 활용토록 지원하고, 국가 간 교류 시 청소년시설 연계 추진

□ 문화예술 분야 활동·교육 지원(여가부, 문체부, 교육부)

-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1학생 1예술활동 사업을 통해 학교 내 문화·예술교육을 확대하고, 학교예술강사 활동 환경 개선 등 추진
- 문화예술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문화소외지역 소규모 학교 대상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* 운영

* ('예술꽃 씨앗학교' 지원사업) 전교생 400명 이하의 문화예술 혜택이 적은 지역의 작은 학교 중심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

□ 생활체육 및 스포츠 체험 기회 확대(여가부, 지자체, 문체부, 교육부)

- 청소년 수련시설 내 체육관 등 활용하여 시설 이용 청소년들의 스포츠 및 생활체육 활동 지원
- 청소년 생활체육 보급을 위해 교내·외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, 학교-지정스포츠클럽 간 연계 강화
- 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원(체육교과, 일반교과, 스포츠 강사 등) 지도역량 강화 지원

② 자기주도적 활동 프로그램 확대

□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활동 강화(여가부, 교육부, 지자체)

- 학교와 청소년활동 시설에서 상호 활용할 수 있는 교과과정과 연계 가능한 PBL* 방식 청소년활동 모델 개발·보급

* Project Based Learning(PBL) : 제시된 문제를 학습자가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습하는 '주도형 학습방식'으로 문제해결능력, 공동체 협력, 의사소통 능력 등 향상

-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지역형 PBL 활동 모델을 확대 운영하고, 지역 우수 활동사례 확산 및 홍보

-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개발한 PBL 방식 활동 모델 등 활용하여 지역 청소년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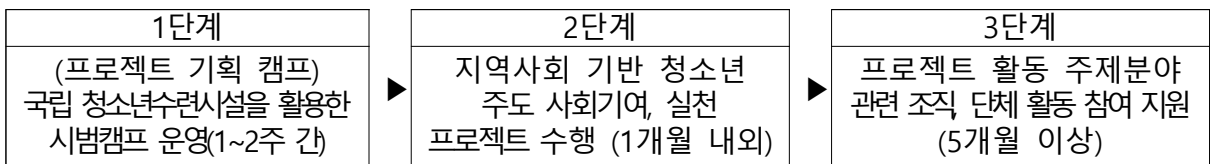
* (경남 PBL) 중학교 도덕·사회 과목 내용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주도 청소년 활동 모델 개발·운영('22년, 경남청소년지원재단, 진해청소년수련관, 함안군청소년수련관 협업)

□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운영 활성화(여가부)

- 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* 활동영역** 확대 등 개편
 - *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: 만7~15세 청소년들이 자기개발, 신체단련, 봉사활동, 탐험활동, 진로개발 중 선택한 활동영역에서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성취해나가는 제도
 - ** 활동영역 : 봉사활동, 자기개발활동, 신체단련활동, 탐험활동, 진로개발 활동 등
-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운영 수련기관과 학교와의 연계 확대*
 - * '23년 충북교육청 산하 30개 학교에서 포상제 활동 시범 운영

□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내실화(여가부, 행안부)

-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젝트 기획캠프와 지역사회 기반 실천 활동 프로젝트를 연계한 '청소년 자원봉사 프로젝트' 도입 및 운영
 - *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젝트 단계별 예시



-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기록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봉사활동 운영기관별 상이한 분류체계 및 유형 등 재분류
 - * 중앙자원봉사센터(1365), 한국사회복지협의회(VMS),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(DOVOL) 등
- 청소년지도사의 자원봉사·사회기여 관련 역량 제고를 위한 네트워킹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

3 안전한 청소년활동 기반 마련

□ 청소년수련시설 정보관리 체계화(여가부)

- 전국 수련시설 안전·운영정보 체계적 관리를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종합시스템(Youth-center Safety Management System, YSMS) 운영
 - * (안전정보) 종합안전·위생점검 결과 및 세부지적사항, 보험가입 현황 등
 - (운영정보) 종합평가, 수련시설 현황, 종사자 정보 등
- 축적된 데이터의 분석 결과, 시설 이력 사항 등을 안전예방·강화 계획 수립 및 학술·정책연구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·제공
- 안전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에게 지역별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정보* 제공
 - * 기상(날씨, 온도 등) 상황, 공기 질, 식중독·재난발생 상황 정보

□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내실화(여가부)

-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·위생점검 및 종합평가*를 지속 실시하고, 내실있는 평가를 위해 종합평가 항목 및 지표 개선 추진
 - *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평가제 운영 중
-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현장 전문가 중심 컨설팅 지원

□ 청소년활동 안전인식 확산(여가부, 교육부, 해수부)

- 안전 관련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고,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
- 청소년 안전의식 수준·현황 파악을 위한 '청소년 안전인식 조사' 방안을 마련하고, 청소년시설 이용자, 학생 등 대상으로 조사 실시

- 청소년 수련시설에 심폐소생술 등 포함 응급처치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시설 이용 청소년 및 종사자 등 대상으로 응급처치 안전교육 실시
 - *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 신규·보수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운영
- 청소년 해양교육원 운영을 활성화하여 해양안전 교육, 해양문화 체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

1-4. 학교안팎 청소년활동 지원 강화

- ◆ 청소년 활동과 학교 간 연계를 통해 지역 맞춤 청소년 활동 강화
- ◆ 지역 내 청소년을 위한 공간·시설 조성 확대

1 학교 연계 청소년활동 지원

□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 학교 협력 강화(여가부, 교육부(교육청))

-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주제 중심 학교교육 프로그램 연계 강화
 -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장비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특성화된 청소년활동 콘텐츠 과정 개발 및 교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·운영
 - * 해양, 우주, 농생명 등 전문콘텐츠 진로·체험 프로그램 개발
- 청소년활동 우수 프로그램 정보를 학교교육계획 수립·운영 등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안내 및 정보 제공
-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활용하여 공공·민간 청소년 활동 시설의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지원
- 학교 연계 활성화를 위해 학교연계형 인증수련활동 유형 신설 및 기준 마련 등 인증제도 개선

□ 학교시설 활용 청소년활동 확대(교육부, 여가부, 지자체)

-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활용하여 학교시설·유희부지 등 이용한 청소년 활동공간 마련 및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 추진
 - 기존 학교시설 활용뿐만 아니라 신도시 계획 단계에서 학교복합 시설 포함 시 청소년 이용공간 마련 등 계획 반영 검토
- 학교와 연계한 돌봄·교육 복합형 ‘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’ 설치 및 운영 확대 추진
 - * 교육의 연장선에서 안전한 돌봄 지원을 위해 교육청·학교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학교 교실을 활용한 방과후아카데미 운영

2 지역사회 연계 학교안팎 청소년활동 강화

□ 지역 내 소규모 청소년활동 공간 설치·운영(여가부, 지자체)

- 지역 유희시설 등 활용한 소규모 청소년활동 공간(시설) 설치·운영
 - 지역별 특성과 청소년 수요를 반영하여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

【지역 청소년 활동공간(시설) 운영 사례】



- 지역사회 중심으로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청소년 활동공간 (시설)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

□ 지역 내 청소년 방과 후 활동 및 돌봄 활성화(여가부, 교육부, 복지부, 지자체)

- 지역별 특성과 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활동 중심의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고 진로체험형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
- 안정적이고 전문적 돌봄 제공을 위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
- 늘봄학교*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정규수업 전후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·돌봄 서비스 제공
 - *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·돌봄 통합 서비스
- 지역아동센터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체계*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지역 아동·청소년에게 보호·교육 등 종합 서비스 지원
 - * (예시)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등

□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협력·지원체계 내실화(여가부, 지자체, 교육청)

- 청소년수련시설과 시·군·구-교육(지원)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자유학기제 등 관련 프로그램 기획·개발 등 추진
-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지역 수련시설 간 정례 협의체 운영으로 청소년 활동 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활성화
 - 중장기적으로 기초 지자체 단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정·운영을 추진하여 중앙-광역-기초로 이어지는 정책 전달체계 확립
 - * (현행) 17개 광역단위 센터 지정운영 → (개선) 기초지자체(228개) 단위 센터 지정·운영

2-1. 위기청소년 복지지원체계 강화

- ① 위기청소년 발굴 및 치유지원 강화
- ② 지역 중심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
- ③ 정보시스템 기반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운영

2-2.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

-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
- ②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
- ③ 후기 청소년(19~24세) 안정적 삶 지원

2-3.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

- ①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
- ② 청소년(한)부모 생활·양육 지원
- ③ 신 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
- ④ 장애 및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

2-1. 위기청소년 복지지원체계 강화

- ◆ 위기청소년 발굴, 고위기 특화 지원 등 발굴-지원-치유 단계별 지원 확대
- ◆ 지역 청소년안전망 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위기청소년 대응체계 내실화
- ◆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등 데이터 중심 지원체계 강화

1 위기청소년 발굴 및 치유지원 강화

□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및 상담 지원 확대(여가부, 교육부)

-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을 위해 ‘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서비스(사이버아웃리치)*’와 ‘찾아가는 거리상담(아웃리치)’을 강화하고, 청소년유해환경감사단 등 통한 발굴 확대
 - * 인터넷 카페, SNS 등의 온라인 매체로 상담자가 직접 찾아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상담 활동
- 청소년 동반자를 통해 위기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 관리 및 위기수준별 상담서비스 제공
 - 청소년 동반자 확대 및 급여체계 개선·활동비 인상 등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
- 청소년상담 관련 교육 제공으로 상담복지센터 내 1388청소년지원단*의 위기청소년 지원 역량강화
 - * 지역 내 위기청소년 지원 위한 민간 차원의 자발적 참여조직(약국, 택시회사, 학원, 변호사 등)
- 위(Wee)클래스, 위(Wee)센터, 위(Wee)스쿨의 효율적 운영으로 학교부적응, 학업중단위기, 학교폭력 피해 등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

□ 고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·특화서비스 제공(여가부, 교육부)

- 고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을 위해 시설 이용 청소년 및 학교 학생 등 대상 위기 진단을 실시하고 신속한 연계 강화

- 청소년쉼터 등 시설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측정 조사* 및 위기 진단** 등 실시
 - * 정서불안, 우울증 등 문제행동 평가를 통해 고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
 - ** 청소년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「위기 스크리닝 척도」 활용(자살, 학교폭력, 가정 폭력, 아동학대, 가출 등 6가지 영역, 13문항으로 구성)
- 초·중·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·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하고, 선별된 위기 학생에 대해 전문기관(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위(Wee)센터 등) 연계
- 고위기 특화 전문 지원을 위해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고위기 집중 심리클리닉* 운영 및 시·도 센터 내 임상심리사 신규배치
 - * ('21~'22년) 시범운영 ('23년) 전국 센터에 운영 모형 안내 및 운영집중 사례관리 및 효과성 측정
- 유관 전문기관 연계 등을 통해 청소년 심리외상 지원* 추진
 - * 법적 근거 마련 등 검토

□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치유인프라 확대 및 지원(여가부, 교육청, 산림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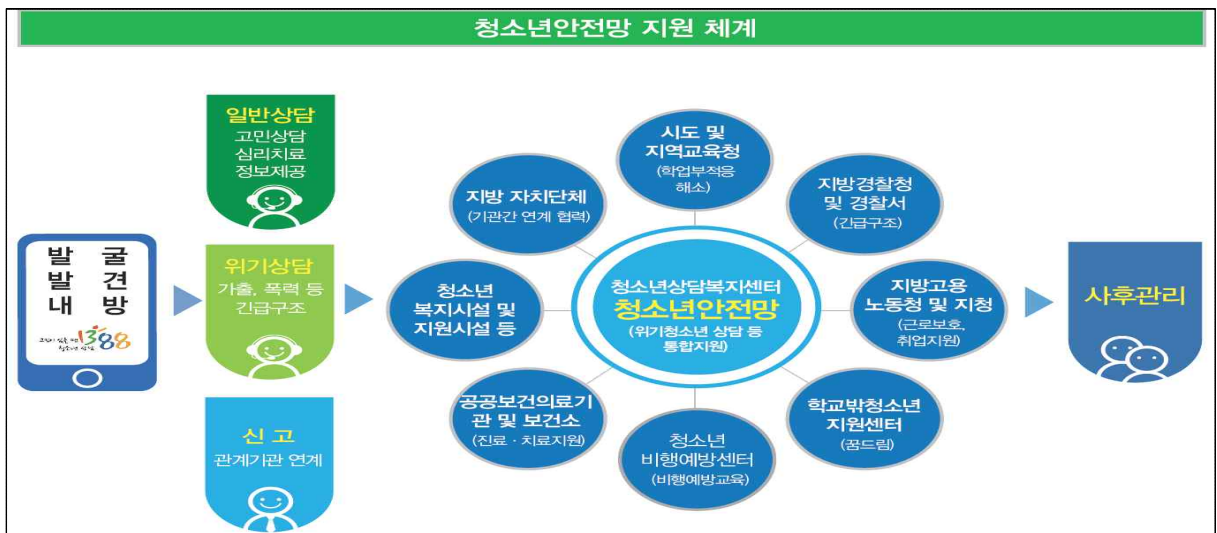
-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치유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숙형 치유시설(디딤센터)의 권역별 확대*
 - *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(2012), 경상권 디딤센터(대구 달성군) 건립(2021), 호남권 디딤센터('26년 전북 익산, '27년 광주) 건립 예정
- 약물(알콜 및 마약성의약품류 등) 중독 문제 치유를 위한 디딤센터 특화치유 프로그램 운영
- 디딤센터(치료·재활)와 학교·교육청 간 협업을 통해 디딤센터 이용 후 학교 복귀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
 - * 학교에 복귀한 학생이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후속 프로그램에 적극적 참여 기회 부여 등 학교 차원의 사후관리 협업
- 산림(숲)을 활용한 위기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자존감 향상 등 치유를 위해 산림교육·치유 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충

- 산림교육센터를 통해 학교부적응,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산림교육·치유 프로그램 개발 운영
 - * 게임 등 행위중독 예방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
- 생활권 주변 산림교육·치유 인프라 확대

2 지역 중심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

□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활성화(여가부, 지자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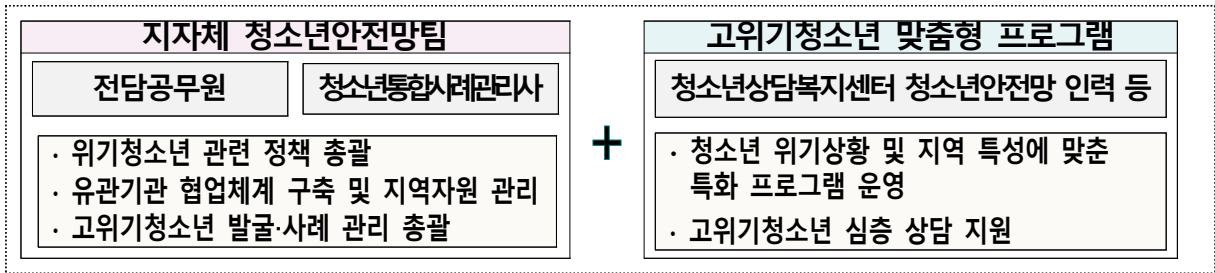
- 지역 청소년안전망*을 통해 지역 내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지원
 - * 아동학대, 가정폭력, 재소자가정, 보호관찰대상 청소년, 자살사고사 유족 청소년 등 지역 내 민감한 위기청소년 정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발굴-진단-지원(상담, 보호, 의료, 자립 등)
- 위기청소년 복합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 간 연계, 위기청소년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고, 지역 내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추진



- 지역 내 위기청소년(청소년상담복지센터), 학교 밖 청소년(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), 가정 밖 청소년(청소년 쉼터),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(드림마을) 등 위기유형별 지원기관 간 연계 강화

□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확대 운영(여가부, 지자체)

- 지역 중심의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위해 지자체 ‘청소년안전망팀’을 단계적으로 확대(‘23년 기준 22개)
-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내 전담공무원 및 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 배치 확대를 통해 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 강화



- 위기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‘청소년상담복지센터’ 직원 고용 안정화·처우 개선 추진

□ 전문기관·학교 간 청소년 위기 공동대응 협력(여가부, 교육부(교육청), 복지부, 지자체)

- 청소년 위기상황 발생 시 지역 내 전문기관(상담복지센터, 정신건강복지센터 등)-학교-교육청 간 협업체계 구축*을 통해 공동대응
 - * 교육청 긴급대응 관련 지침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연계기관으로 포함, 교육(지원)청 위기대응 체계에 청소년 관련 시설 전문가, 정신건강 전문가 포함 등
-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운영 및 위기청소년 대응 협의체인 ‘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’ 등에 교육청 적극 참여 및 학교 안 위기청소년 발굴·연계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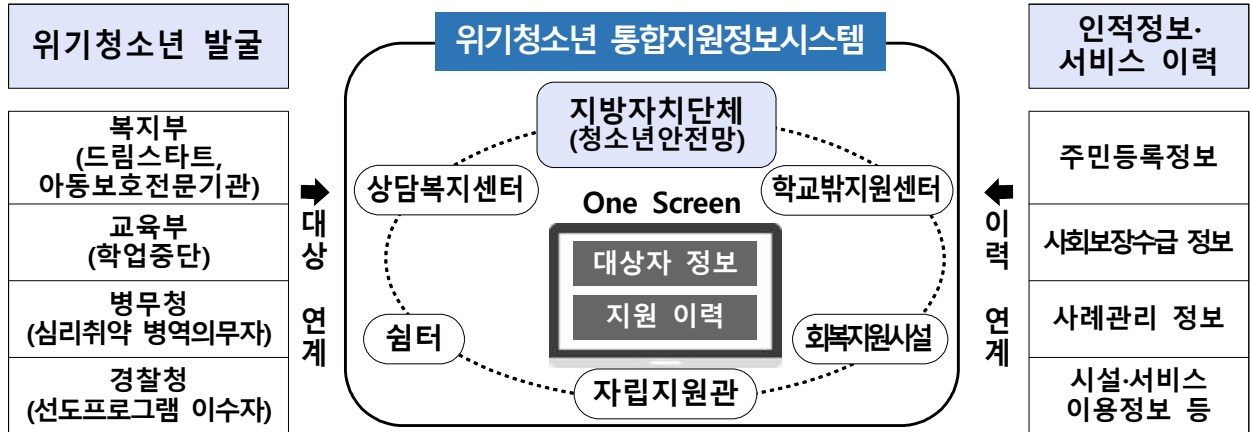
③ 정보시스템 기반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운영

□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(여가부)

-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지원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

- 학교·경찰·시설 등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, 위기유형 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통합지원 등 사례관리*

* 위기수준 진단 후 통합서비스 계획수립 →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→ 사후관리



- 시스템 내 위기청소년 관련 서비스·정보 안내, 유관 서비스 신청 및 예약 기능 등 편의기능을 탑재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
- 통합지원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청소년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추진
 - * 지원기관별 발굴, 서비스 지원내용, 사후관리 등 단계별 지원 성과 분석
- 위기청소년 관련 데이터 집적 및 통계분석 기능을 도입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의사결정에 활용
-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정형·비정형 통계 생산으로 맞춤형 분석 지원

□ 청소년상담1388 시스템 고도화(여가부)

- 비대면 상담채널(전화, 모바일, 사이버) 시스템 통합을 통해 위기 청소년 사례관리 및 상담 접근성 제고 등 청소년상담1388 기능 강화
 - * 도서산간 지역 거주 청소년 대상 서비스 지원을 위한 화상상담 시스템 구축 등
- 24시간 전문상담인력을 충원하여 상담 대기시간 단축 등 이용자 편의 제고 및 빅데이터 기반 상담 제공으로 전문성 강화

2-2.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

- ◆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강화
- ◆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위한 인프라 및 지원수준 향상
- ◆ 후기청소년의 원활한 사회진입을 위한 취·창업 등 지원 다양화

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

□ 학교 밖 청소년 발굴·연계 협력 강화(여가부, 교육부(교육청))

- 사전 정보제공 동의 없이 정보 연계가 가능한 대상을 초·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*
 - *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마련('22.12) → 개정 추진('23~)
- 중학교 졸업 후 고교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정보연계 방안 검토
- 학교를 그만 둔 학생 정보가 학교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즉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원연수 활성화 및 정보연계 모니터링 강화
- 신속한 정보연계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, NEIS)과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연계 추진
- 학교를 그만 둔 학생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홍보 활성화

□ 학교 밖 청소년 학업·진로지원 확대(여가부, 교육부)

-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위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및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 개발·운영, 온라인 교육플랫폼* 구축으로 학습 전 과정 지원 추진

* LMS(Learning Management System)

-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*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
 - * (현재) 대학생 및 초·중·고생 → (개선) 학교 밖 청소년 포함
- 공적 교육체계에서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진학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청소년생활기록부*를 인정·반영하는 대학 단계적 확대**
 - * 학교 밖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, 행동 특성 등 활동 내용을 기재하는 기록부
 - ** (21년) 6개 대학 → (22년) 11개 대학 → (23년~) 시도 광역 단위별 인정대학 확대 추진
- 학교 밖 청소년 진로체험·일경험 지원 등 진로 지원 확대
 -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중·고등 연령용 진로동기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통해 진로설계 및 지원
 - 내일이름학교 참여 청소년의 선호도조사 반영한 훈련과정 개설 등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 일경험 지원 강화

□ 학교 밖 청소년 활동 지원 강화(여가부, 교육부, 지자체, 문체부)

-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등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교통비 등 활동비 지원 검토
- 학교 밖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공공부문 각종 공모전, 프로그램 등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참가 자격을 ‘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’으로 개선하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
- 학교 밖 청소년대상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확대

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프라 확대(여가부)

- 학교 밖 청소년이 학습, 역량강화, 진로체험 등 다양한 활동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 확충
 - *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부족으로 학습지원 직업역량지원 교육지원 등 지원 강화에 제한

- 메타버스 등 활용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플랫폼 고도화*
 - * ('22) 발굴 플랫폼(ZEPETO) 구축 → ('23) 서비스 플랫폼(ZEP 등) 구축 → ('24~)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·콘텐츠 관리
- 학교 밖 청소년 전문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단계적 확충
-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공백 해소를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 복지시설 간 연계 강화
 - * 1차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대상을 적극 발굴 및 상담 등 지원하고, 생활 등 자립지원 위해 복지시설로 연계

2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

□ 가정 밖 청소년 학업·취업 등 진로지원 강화(여가부, 교육부, 고용부)

- 학업 지원 위해 대학 장학금 및 행복기숙사 우선 지원*
 - * 근로장학금('21.8월~), 국가장학금Ⅱ유형('21.8월~) / 행복기숙사('22.2월~)
- 복지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 '도전+프로그램' 및 '청년도전준비금' 등 지원
 - * 「청년도전지원사업」으로 도전+프로그램(5개월) 신설('23년): 청년도전준비금(참여수당 50만원 ×5개월+이수수당 50만원)
- 복지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진로 및 취업지원 등 상담 지원

□ 가정 밖 청소년 경제 및 주거지원 확대(여가부, 지자체, 국토부)

-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 마련이 가능토록 자립지원수당 확대* 및 지자체 자립정착금** 확대
 - * 지원단가 ('22년) 월 30만원 → ('23년) 월 40만원 / 지원인원 ('22년) 140명 → ('23년) 240명
 - ** ('23년) 부산 1,000만원, 울산·제주 500만원 지원 중

- 복지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타 사업 연계 등을 통한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
- 자립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공공 임대주택 지속 지원

□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기반 강화(여가부)

-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청소년 자립지원이 유사 정책대상(자립준비청년 등)에 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개정
 - 복지시설 입·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 내용 구체화
 - *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·취업·경제적 지원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(자립 정착금 지급, 사후관리체계 구축 등)된 반면에 복지시설 입·퇴소 청소년 지원 규정은 포괄적
- 쉼터 퇴소 후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이 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관을 전국 시·도로 확대 추진

□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이용 지원 내실화(여가부)

- 자립지원 앱(‘자립해냄’) 기능개선 및 서비스 다양화 등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정책적 서비스 관련 정보제공
-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 및 생활 지원을 위한 쉼터 확충 및 맞춤형 상담, 교육, 문화활동 등 지원
 - 어린 시기 가출 등으로 인한 대인관계 어려움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, 사회성 훈련 제공 등 지원
- 쉼터 종사자 역량 제고를 통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준비 지원 내실화
 - * 관련 교육 제공, 지원체계 간 교류 및 연계 강화 등

-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주거, 소득·생계·금융, 진학, 취업 교육·훈련 등 지원제도* 안내서 제작·배포

* 지원제도 예시 : (주거)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 쉼터 퇴소청소년 공공 임대주택 지원 (소득생계금융) 청년희망키움통장,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(진학)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(취업교육훈련) 국민취업지원제도, 국민내일배움카드, 청년도전지원사업 등

③ 후기 청소년(19~24세)의 안정적 삶 지원

□ 후기 청소년 진로·직업교육 실시(여가부)

- 비진학·미취업 후기청소년 대상 진로의식 고취, 진로설계 코칭 및 관련 직업교육 연계 지원
-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 내 청소년활동 공간을 활용하여 후기청소년 진로프로그램 지원

□ 후기 청소년의 창업시장 진입 지원(중기부)

- 청소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기업가 정신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(비즈쿨 페스티벌 등) 지속 운영
-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통해 후기 청소년(청년) 대상 창업지원 적극 추진*
 - * (창업준비) 창업기본소양 및 기업가정신 교육, 창업자금 지원 등 (성장·안착)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 지원, 관련 규제 개선 등 (재도전) 요인 분석 및 재기 지원 등

□ 후기 청소년 취업 지원(고용부)

- 청년일경험 사업 등 통해 후기 청소년의 다양한 분야 일자리 경험 지원 및 청년내일채움공제*로 취업을 통한 경제적 기반 지원
 - *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경력형성 및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3차(청년·기업·정부, 2년) 부금 적립(만기금 1,200만원)

-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기 청소년(청년)*의 취업 촉진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** 지원 지속

* 6개월이상 실업, 고졸이하 학력,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등

**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만 15~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2년 간 최대 1,200만원 지원(사업주 지원)

- 청년 워크넷 등 통해 일자리, 직업진로, 고용정책 등 정보제공

□ 후기 청소년 건강 및 주거 지원(복지부, 여가부, 국방부, 국토부)

- 후기 청소년(청년) 대상 청년마음건강바우처* 연계 강화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통한 마음건강 상담 지원 강화

* 우울·불안·스트레스 등 문제로 심리상담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

- 군상담관 제도 등 활용하여 군 복무 후기 청소년의 정서·심리적 상담 및 적응 지원

- 건설형 공공임대 및 청년유형 전세임대 등을 통해 주거지원 강화

2-3.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

- ◆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 강화
- ◆ 청소년(한)부모 특성을 고려한 학업 및 경제지원 등 내실화
- ◆ 은둔형, 수용자 자녀 등 쉽게 드러나지 않는 유형의 위기청소년 발굴·지원
- ◆ 장애, 경계선지능 청소년 대상 지원체계 강화

1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

□ 다문화가족 청소년 학습 및 사회적응 지원(여가부, 교육부)

-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조기 적응을 위해 ‘징검다리과정’* 운영 내실화 및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 확대
 - * (초등) 적응 위한 준비교육으로 생활과 학습영역으로 구성, 특성에 따른 중점 학습요소 반영 (중등) 의사소통·학교생활 영역으로 구성, 담당교사와 다문화 언어강사가 함께 지도
-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제고를 위해 대상자 특성별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, 찾아가는 교육 실시 및 원격학습 콘텐츠·자료 제작·배포
 - * 전국 가족센터 등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 실시 등
- 다문화 청소년이 이중언어 등 강점을 특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 및 다문화가족 인재 DB 연계·활용 지속 강화
-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안정 등 위해 심리상담 및 진로지도 운영

□ 이주배경 청소년 종합 통계 구축 및 지원(여가부, 통계청, 교육부, 법무부, 통일부)

- 이주배경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이주배경 청소년 종합 통계 구축*
 - * 통계청(이주배경 청소년 통계 DB), 교육부(이주배경 청소년 학업중단율) 등 행정 데이터 연계하여 유형별·연령별·지역별 현황 등 분석
- 레인보우스쿨* 등을 통해 한국어 능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지원**
 - * (22년) 15개 지역, 27개 기관 / ** 상담, 한국어 교육, 사회적응 프로그램 및 진로교육 등

② 청소년(한)부모 생활·양육 지원

□ 청소년(한)부모 사례관리 및 학업 지원(여가부, 교육부)

- 청소년(한)부모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취약가족 통합사례관리(학습·정서, 생활,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)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
 - * 사업수행기관(가족센터) : ('21년) 88개소 → ('22년) 93개소 → ('23년) 98개소
- 학생 미혼모가 임신·출산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학생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연계 운영을 통한 학습 지원
- 청소년(한)부모가 학업 중단 이후에 다시 학업서비스(검정고시 지원 등)를 원하는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하여 학업 지원

□ 청소년(한)부모 양육비 지원 강화(여가부)

- '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'* 시범사업 기간 확대**
 - *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대상으로 자녀 1명당 20만원씩 지원
 - ** ('22년) 6개월 → ('23년) 12개월
-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속 추진
 - *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

③ 신 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

□ 가족돌봄청(소)년 실태파악 및 지원체계 마련(복지부)

- 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가족돌봄청(소)년 실태조사 실시
 - 실태파악 위해 중·고등학생, 학교 밖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*,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 연계 조사·분석
 - *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, 교육청,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 통해 설문 참여 안내홍보
- 실태조사 결과 등 토대로 가족돌봄청(소)년 발굴·지원체계 마련

□ 가족 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(법무부, 지자체, 여가부, 복지부)

- 수용자 자녀 현황조사를 정례화하고 수용자 자녀 지원* 모니터링
 - * 긴급 물품 지급(30만원 상당) 및 지자체 복지 지원 연계
- 지방교정청* 수용자 자녀 지원팀 운영 활성화
 - * 전국 4개지역(서울, 대구, 대전, 광주) 설치·운영
-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청소년안전망 등 유관 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상담 등 제공
- 자살사고사 유족 청소년 사례관리 등 위해 정보연계, 심리안정 위한 상담, 사례관리 등 지원

□ 은둔형 청소년 발굴 및 지원(여가부, 복지부, 지자체)

- 은둔형 청소년* 규모 등 실태파악을 위한 지자체 실태조사 사례** 확산
 - * (은둔형 청소년)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상을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, 일상적인 사회생활 등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
 - ** (예시) 서울시(22.4~12) : 사회적 고립 척도를 통해 6개 분야(▲사회적 접촉, ▲정체성 불안, ▲가족이나 가까운 친척관계, ▲친구관계, ▲일터, ▲지역사회) 측정 및 진단(일반군, 위험군, 고위험군)
- 고립·은둔 정의 개발, 지원모형 개발 등 고립·은둔형 청(소)년 발굴·지원체계 마련
- 은둔형 청소년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대상으로 포함토록 청소년복지 지원법령 개정
 - *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4 신설 :
(현행) 보호지원대상자 중 비행·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, 학교 밖 청소년,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→ (개선) 은둔형 청소년 추가
- 청소년지원기관 등 통해 은둔형 청소년 대상 서비스(상담, 정보제공 등) 지원체계 운영

□ 채무상속 위기청소년 법률지원 제공(여가부, 지자체, 법무부)

- 채무상속 위기에 놓인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
 -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과 연계하여 위기청소년 법률지원 근거 마련(청소년복지 지원법령 등) 및 조례 정비 등 추진
- ※ [민법 제1019조 개정, '22.11.24]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,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간 한정승인(상속 취득 재산 한도 내 채무 변제 조건) 기회 부여
- 대한법률구조공단, 법학전문대학원 내 '리걸 클리닉'(Legal Clinic) 연계 등 통해 법률 상담 등 지원
 - *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회원 단체 26개소

4 장애 및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

□ 장애청소년 부모 지원 및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방안 마련(복지부, 교육부, 여가부)

- 발달장애 청소년 가정 부모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,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해 가족 지원 강화
- 경계선지능* 학생 조기확인을 위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·보급하고,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추진**
 - * 일반적으로 지능지수 70~85 사이에 속하여 지적장애의 연속 상에 있으나, 지적장애로 미분류(장애인구의 약 2.7배), 주의 집중이 어렵고 의사소통 등에 서툴러 학습부진 등 발생
 - ** 교육(지원)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및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심층적 진단·지원
- 범부처 연계 경계선지능(느린학습자)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('24~) 및 지원방안 마련*
 - * 제2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('27)에 반영
- 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조기확인 위한 진단 및 사례관리 등 지원

3-1. 청소년이 안전한 온·오프라인 환경 조성

- ① 디지털 역기능 예방
- ② 사이버 및 학교폭력 예방 강화
- ③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
- ④ 청소년 친화형 생활 환경 구축

3-2.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회복 지원

- ① 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응 강화
- ② 청소년 성범죄 피해 지원 및 예방교육 확대
- ③ 청소년 선도보호 및 회복 지원

3-3. 청소년 근로보호 강화

- ① 근로유형별 청소년 보호 강화
- ② 근로청소년 부당처우 예방 및 보호
- ③ 청소년과 사용자의 근로보호 인식 확산

3-1. 청소년이 안전한 온·오프라인 환경 조성

- ◆ 청소년의 건강한 디지털 환경 이용을 위해 유해요소 차단 및 과의존 등 예방 강화
- ◆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 폭력 등 대응을 강화하고, 청소년이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
- ◆ 도박, 유해약물(마약류 등) 등 유해행위 방지 및 유해업소 단속 강화

1 디지털 역기능 예방

□ 디지털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(여가부, 방통위)

- 청소년의 디지털 유해환경 접촉 관련 주기적 실태조사* 및 제도개선
 - * (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, 2년 주기) 청소년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매체 유해 상황 및 경험 실태 조사
- 디지털 환경의 청소년 유해성 모니터링 및 불법·유해정보 삭제·차단 등 대응 지속
- 디지털 플랫폼(인터넷개인방송, SNS, 커뮤니티, 검색포털 등)의 청소년 보호조치* 이행점검 및 청소년 보호 협력 강화
 - *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·청소년 보호지침 준수(아동·청소년 유해 콘텐츠 제작 금지, 아동·청소년 출연자의 심야(22~6시) 및 장시간 출연금지 등) 및 크리에이터 청소년 보호 교육지원 등

□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지원(여가부)

- 디지털매체 과의존 방지 및 위기 조기발굴 등 예방 강화를 위해 인터넷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개선*
 - * 대상 : ('22) 초4·중1·고1 → ('23) 초1 추가(보호자 관찰진단)
분야 : 사이버 도박 문항 신규 추가(중1, 고1)
- 발굴된 위험군 청소년 등 대상 드림마을 연계, 치유프로그램* 제공 통한 치유지원 확대
 - * 개인·집단 상담, 부모교육, 가족캠프, 특수치유 지원 등 종합적·전문적 치유 프로그램 운영

- 진단·발굴-치유지원-사후관리로 이어지는 통합지원 강화를 위해 드림마을 등 지역사회 내 관련 치유기관 간 협력 강화

□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지원(개인정보보호위)

- 아동·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 실질화
 - 아동·청소년의 잊힐 권리 실현을 위해 온라인에 게시된 글·사진·영상 등의 접근배제 및 검색목록 배제 지원
 - 아동·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강화하는 「(가칭)아동·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」 제정
- 개인정보 침해 시 신속하게 상담·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내 아동·청소년용 전용 페이지 신설
-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의 개인정보 교육을 확대하고, 아동·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
- 아동·청소년 보호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교육 등 지원

② 사이버 및 학교폭력 예방 강화

□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및 인식 확산(교육부, 여가부)

- 복잡·다양해진 사이버폭력 이해 및 대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
- 신종 사이버폭력 등 변화하는 폭력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용 표준연수자료 개정판 개발·보급

- 사이버폭력예방교육주간 운영 등 가정·학교·사회 등이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식 및 경각심 제고
 - * 사이버폭력예방교육주간(6월3주) 연계 학생, 학부모, 교원용 사이버폭력 예방·대응 리플릿 등 보급

□ 학교폭력 방지 및 대응체계 활성화(여가부, 교육부)

- 또래상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도교사 교육 내실화 및 맞춤형 코칭단을 확대하고, 대상을 학교 재학생 중심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
- 학교폭력 예방 현장 지원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프로그램* 내실화 및 메타버스 활용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
 - *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생, 학부모 등 대상별 맞춤형 체험·활동 중심 예방교육 프로그램
- 학교폭력예방 교육주간 등과 연계하여 학교, 지역사회 등 캠페인 전개

□ 사이버 및 학교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(교육부, 여가부, 경찰청)

- 사이버 폭력 피해자에 대한 종합 연계 지원 및 협력
 -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청소년이 사이버 폭력 경험 시 관련 지원 제공 등 정보를 연계하고, 피해자 사건 수사 필요 시 경찰청 연계
- 고위기 학교·사이버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전문 상담·치유기관 연계를 통해 회복 지원
- 학교(사이버) 폭력 피해 학생의 학교·일상생활 적응 지원 및 지역 내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 제공

3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

□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 지원(경찰청, 여가부, 방통위, 사감위)

- 불법 도박 사이트, 도박 홍보 콘텐츠 등 단속, 삭제·차단 등 조치 강화
- '도박문제예방치유원' 등을 통해 도박문제 청소년 맞춤형 온·오프라인 상담서비스 및 치유프로그램 지원
-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체계적 예방교육 추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
- 도박문제 예방교육 확대를 위해 민·관·학 협의체 운영 강화 및 관계부처 청소년 기관과의 연계 추진

□ 유해약물 유통 차단 및 오·남용 예방 강화

(식약처, 경찰청, 여가부, 교육부, 지자체, 복지부)

- 온·오프라인을 통한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 단속
 - 온라인 기반 청소년 대상 마약류·담배·주류 등 불법 판매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
 - *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상 판매·유통 모니터링 확대
 - 오프라인 주류·담배 판매 사업주 등 대상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속·계도 활동 지속 실시
-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 차단 및 예방 교육·홍보 강화
 -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집중 점검
 - 학교 안팎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
 - * 「마약류 예방 분과 협의체」 구성·운영(22.11~, 식약처·여가부·교육부 등)을 통해 학교 안팎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·홍보 활성화를 위한 협업방안 등 논의

- 청소년 음주·흡연 예방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운영
 - 청소년 대상 음주·흡연 예방교육을 지속 강화하고,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 프로그램 공모전 등 통한 교육 우수사례 발굴·확산
 - *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및 확산 등
 - 흡연 학생 대상 금연프로그램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운영

□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강화(여가부, 경찰청, 지자체)

- 신·변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합동점검 및 룸카페 등 지능형 규제회피업소의 규제대상 명확화 등 제도개선 추진(부처 합동)
-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 업소에 대한 민·관 합동 계도·점검·단속 지속 실시

4 청소년 친화형 생활 환경 구축

□ 청소년 밀집지역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(지자체)

- 청소년 대상 범죄 및 안전사고 급증 지역 대상 범죄예방환경 디자인(CPTED) 설계 적용을 확대하고, 지자체 ‘안심골목길 조성사업’과 연계 검토
 - * 범죄예방환경디자인(CPTED,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) : 범죄예방 등 위해 건물높이를 고려한 시야 확보, CCTV 등 설치, 범죄활용 가능 물체 차단 등
- 지역 내 재개발 지역과 폐가 등에 대한 진입차단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을 통해 비행 장소 등 이용 차단

□ 지역 내 청소년 친화 디자인 조성(지자체)

-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청소년 친화 디자인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지역 내 청소년 친화 거리 조성 검토
 - * 유니버설 디자인(Universal Design, 장애의 유무나 성별, 연령, 국적, 문화적 배경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, 건축, 환경, 서비스 등을 만드는 디자인) 등 활용

- 지자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 등 통해 청소년 또는 청소년 관련 전문가 참여 규정

□ 청소년이 안전한 보행환경 마련(지자체, 경찰청)

- 청소년 등하교 거리 및 학교 주변 안전보행을 위해 보도 불법 주정차 연중 수시 집중 단속 실시
- 청소년이 쉽게 이용·접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(전동 키포드 등) 인도 주행 단속 강화
- 청소년 밀집지역 대상 청소년 눈높이를 고려한 안내판 디자인 개선

3-2.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회복 지원

- ◆ 아동·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
- ◆ 성범죄 피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, 2차 가해 방지, 예방교육 등 지원 강화
- ◆ 청소년 범죄 행위 방지와 회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정책기반 구축

① 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응 강화

□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실태 파악(여가부)

-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실시*·정례화
 -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유포 현황 및 양상, 피해자 지원 수요 및 일반 국민 인식 등 종합적 실태 파악 및 정책 수립 등에 활용
- * ('22년) 예비연구를 통해 조사 방향 및 문항설계 등 실시 → ('23년) 제1차 본조사

□ 기업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치 지원(방통위)

- 인터넷 플랫폼(인터넷개인방송, SNS, 커뮤니티, 검색포털 등)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및 기술적·관리적 조치 모니터링과 이행점검 강화
 - 기업의 기술적·관리적 조치 이행 및 디지털성범죄물 재유통 방지를 위한 DNA DB* 구축 및 필터링 기술 제공 등 지원
 - * 디지털성범죄물 등을 식별·계재제한 할 수 있도록 영상의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고유값(DNA)으로 변환한 데이터베이스(DB)
- 기업별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관련 투명성보고서* 작성·공개
 - *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64조의5에 따라 일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신고·삭제 요청 등 처리 실적 등을 담은 '투명성 보고서'를 방통위에 제출 의무화

□ 아동·청소년 성범죄자 검거체계 강화(경찰청, 방통위)

- 정부-산업-NPOs* 등 다주체 협업방식의 공조체계 강화
 - 신속한 삭제 조치·접속 차단 및 성범죄자 검거 등 범죄대응력 강화
 - * Non-Profit Organization : 비영리조직
 - **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성착취물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점 고려
 - 인터폴 회원국 경찰을 활용하여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인터폴 국제아동 성착취 데이터베이스(ISCE DB) 구축 및 피해아동 식별과 수사현황 공유

② 청소년 성범죄 피해 지원 및 예방 교육 확대

□ 성범죄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(여가부, 경찰청, 방통위, 지자체)

- 성매매 피해아동·청소년 지원센터,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, 청소년 매체환경보호센터 등 통해 성착취 피해 아동·청소년 지원·보호 확대
 - * 청소년 성매매 의심정보 신고, 온라인 그루밍 등에 의한 불법촬영 및 성폭력 등 범죄피해 지원 확대 등

-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 시스템 연계로 불법촬영물의 효율적인 삭제 지원
- 2차 가해 방지 등 성범죄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
 - 청소년 포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'잊혀질 권리' 보장 위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강화 관련 관계부처 협업 추진
- 위기 청소년 지원체계 종사자 대상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, 피해 보호·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

□ 대상별 맞춤형 성범죄 예방교육 확대(여가부, 교육부)

- 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·프로그램 개발 및 플랫폼 연계 등 통해 효과적 예방교육 지원
 -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초·중·고·대학생, 양육자, 교사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 지속 개발
 - 교육부 플랫폼(잇다, e-학습터)과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(디클, Digital Clean) 연계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방교육 실효성 확보

③ 청소년 선도보호 및 회복 지원

□ 청소년 법 위반 유발 방지 및 선도보호(여가부, 경찰청)

- 청소년의 법위반 행위 유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안내 등 회복적 선도·보호 활성화 추진
- 신분증 위·변조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유발한 청소년 선도 필요 시 경찰 연계 등 조치 이행

□ 소년범죄 통계관리 및 인프라 확충(법무부)

-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(소년법 개정)
 - * 현재 소년범죄 관련 통계는 경찰, 검찰, 법원 등에서 개별적으로 생산 관리 중
-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을 통해 비행예방교육·분류심사 기능 전문화 및 과밀 수용 해소

□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확충 및 지원(여가부)

-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확충하여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년법 1호 처분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, 상담·학업·자립 등 지원
 - 메타버스 등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 대상 다양한 회복서비스 지원

3-3. 청소년 근로보호 강화

- ◆ 플랫폼 근로자,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등 근로보호에 취약한 청소년 보호 강화
- ◆ 부당처우 방지 및 필요한 지원을 적시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지원 확대
- ◆ 사회 전반 청소년 근로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

1 근로유형별 청소년 보호 강화

□ 근로형태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(고용부)

-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하여 기존 청소년 근로보호체계에서 취약한 근로형태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 추진
 - * 각 워커(Gig worker) 등 新 근로형태에 종사하는 청소년 대상 근로보호 방안 검토

○ 현행 취직인허증 금지직종*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·감독 강화

* (취직인허증)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자에 대해서 일정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직을 인허하는 증명서(근로기준법 제64조)
(취직인허증 금지직종) 타 법령에서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고용·금지하는 직종, 교도소·정신병원에서의 업무, 안전·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(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)

□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권리 보호(교육부, 고용부)

○ 현장실습 참여 산업체 선정관리 및 컨설팅 지원

- 안전관리 미흡, 현장실습생을 통한 기업 이윤창출 등 부적절 행위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실습 참여 제한
- 현장실습 기업 중 노동법 준수 취약기업* 등 대상으로 관련 법령 교육 및 노무관리 컨설팅 등 지원

* 유해·위험 사업장, 신고 사건·산재 다발 사업장 등

○ 현장실습생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인프라 강화

- 온라인 현장실습 관리시스템(LMS)* 기능개선 등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고,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 홍보 강화

* 현장실습 LMS(Learning Management System) : 온라인 현장실습 관리시스템

○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현장실습생 모니터링 및 학교·산업체 대상 정기적 지도·점검 실시

□ 예·체능 분야 청소년 보호(문체부, 방통위)

○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, 학습권, 수면권, 휴식권 등 보장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·배포 및 기획업자 대상 윤리교육 강화

○ 방송출연 아동·청소년 보호 표준 가이드라인 이행 제고 유도

* 방송평가 시 표준가이드라인 활용여부 평가 등

- 학생 선수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청소년 운동선수 관련 감독, 코치 등 관계자 교육 등 실시

2 근로청소년 부당처우 예방 및 보호

□ 근로청소년 부당처우 구제 지원(여가부, 고용부)

- 청소년근로보호센터,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등 통한 청소년 부당 처우 구제 및 중재 등 지원
 -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현장지원상담을 통해 부당처우 현장 방문, 사업주와 분쟁 중재 및 신고 지원
 - 근로감독관·공인노무사 등을 통한 근로권익 침해 및 부당해고 구제 지원
 -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신고 활성화를 위한 상담 연계 강화
- 청소년 근로보호 기능 강화 위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, 청소년근로 권익센터 등 유관 기관 사업 간 연계·협력 강화
- 청소년 근로보호 가이드북(웹북) 제작·배포

□ 근로환경 모니터링 및 감독 내실화(여가부, 고용부)

- 청소년 아르바이트 주요 현장 정기 점검 및 계도 활동 내실화
 - 청소년고용금지 위반,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감독하고, 불시 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의 법령 준수 지속 모니터링
 - * 위반 사항 적발 시,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
- 취약계층 다수 고용 및 상습 범위반 등 법 준수 취약 사업장 감독 강화
 -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 등의 배달종사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 점검

③ 청소년과 사용자의 근로보호 인식 확산

□ 청소년 대상 근로보호 및 직업윤리 교육 지원(여가부, 고용부, 교육부)

-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및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통해 청소년 대상 근로보호 교육 및 상담 등 지원
- 학교를 통한 근로보호 및 직업윤리 교육 제공
 - 직업계고학생 등 대상 근로 권리·산업안전보건 등 관련 교육 제공
 - * 온라인 또는 소규모 밀착형 교육 등

□ 청소년 고용사업자 근로보호 교육 실시(여가부, 고용부)

- 청소년 고용사업자 대상 근로 보호사항 안내 및 교육 강화
 - 사업주 등 대상 청소년 근로보호 사항* 안내(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활용), 중소기업장 노무관리 지도 등 실시
 - * 최저임금 준수, 근로계약서 작성, 임금체불 및 직장괴롭힘 예방 등

4-1. 청소년 참여 활동 강화

- ①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기회 활성화
- ② 청소년 참여 역량 제고 및 소통 강화

4-2. 청소년 권익 증진

- ① 청소년 권리 보장 및 대표성 제고
- ② 청소년 건강 및 생활 지원

4-1. 청소년 참여 활동 강화

- ◆ 법제, 예산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교류를 통해 참여 활성화
- ◆ 청소년 참여 역량 강화, 소통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 참여활동의 실효성 제고

1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기회 활성화

□ 청소년 자치활동 참여 확대(여가부, 지자체, 교육청)

- 활동프로그램 등 개발 시 청소년 자치조직 제안 및 참여 보장
 -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설계단계부터 청소년 주도의 자치조직 참여 및 의견수렴이 이뤄지도록 지원
-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에 청소년 참여 및 확대를 위한 관련 지침 개정 등 추진
- 학생회·학급회의 등 학교 내 학생 자치 참여기회 확대

□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확대(여가부, 지자체, 교육부(교육청))

- 지역 내 청소년이 자신과 밀접한 환경에서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참여모델 확대 운영*
 - *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대상 지자체 확대
- 지역 내 청소년 참여활동 간 교류 및 소통 지원
 - 지역 내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체 구성, 정책제안 교차검토 등 참여기구 간 교류 및 연계 활성화
 - 청소년 특별회의·참여위원회 구성 시 학생회 등 학교자치회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및 지원
 - 학교와 지역 내 청소년 참여 관련 활동정보 공유방안 마련

- 청소년의 정책 참여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권고
 - * (사례) 「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- 지자체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에 대한 정책 환경에 맞는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및 모니터링 지원

□ 청소년정책 참여활동 지원(지자체, 여가부, 법제처)

-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의회 운영 실태 파악 및 활성화 지원
 - * (사례)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등
- 청소년이 법제 관련 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·청소년 법제관 운영
 - * (어린이법제관) 초등학교 4~6학년 대상 법 퀴즈 대회 등 입법활동과 법제교육 지원
(청소년법제관)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법안 만들기 진로탐방 간담회 등 입법활동 지원
- 청소년참여예산제 정착·확산 위한 제도적 지원
 - * 청소년참여예산제 '표준 조례 모델안' 제시, 참여예산학교 활성화 등

2 청소년 참여 역량 제고 및 소통 강화

□ 청소년 참여역량 강화(여가부, 지자체)

- 참여기구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해 실천적 참여 학습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참여기구 활동 인재 DB를 구축하고 멘토링의 밤 개최 등 참여기구 청소년과 사회 진출 선배와의 네트워킹 지원
-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 내 정책제안교육 등 참여 관련 교육 운영 확대, 참여 지도인력에 대한 컨설팅 등 통해 참여 전문인력 양성 지원

□ 청소년 간 소통 강화 및 공동체 역량 함양(여가부, 지자체)

- 청소년 참여포털*을 통한 청소년 의견 상시수렴 통로 활성화
* 청소년 참여포털 : youth.go.kr/ywith
- 청소년 주도의 권역별 청소년 원탁회의, 청소년 축제, 포럼 등 개최 등 통해 청소년 참여 관련 소통 및 협력 확대
-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등 대상으로 관계성 역량 함양을 위해 단체활동 프로그램 개발·운영
* 청소년이 상호 이해 및 존중의 자세를 배우고,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소통 중심 단체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 등
-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확산

4-2. 청소년 권익 증진

- ◆ 청소년 권리 증진 위한 협약 이행 및 대표성 제고
- ◆ 예방접종, 급식, 생활습관 등 청소년 생활 및 건강 증진 지원

① 청소년 권리 보장 및 대표성 제고

□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(복지부)

-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·이행
-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련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
※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도('이름도 들어봤고,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') :
(18) 11.8% → ('19) 16.1% → ('20) 21.2% (2021 아동·청소년 인권실태조사)

□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대표성 강화(여가부, 지자체, 관련부처)

- 청소년정책 관련 각종 위원회에 청소년(15세~24세) 위원 위촉 권고
 - * 청소년육성위원회 내 청소년위원 일정비율 이상 참여 권고 등 기준 마련
- 국가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수립 등 관련 추진체계에 청소년 및 청소년전문가 등 참여 보장 위한 법·제도 개선

② 청소년 건강 및 생활 지원

□ 청소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(여가부, 교육부, 질병청)

- 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검진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구축
 - *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운영 등 통해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관리
- 청소년 수련시설 등 통해 청소년 건강증진 활동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홍보 강화 및 검진항목 확대* 추진
 - * 기존 17개 항목에 안질환, 피부병, HDL·LDL콜레스테롤·중성지방 등 9개 항목 추가('23년~)
- HPV(사람유두종바이러스)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 확대(남성 청소년 등)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
 - * 현재 만 13~17세 여성청소년, 만 18~26세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여성에게 무료 예방접종 지원 중

□ 건강한 생활습관 지원 및 급식 사각지대 완화(복지부, 교육부, 여가부, 식약처, 지자체)

- 청소년 식습관 개선 위해 교육자료 및 교육 가이드라인 등 개발·보급*
 - * 영양·식생활 교육자료, 신체활동 증진 등을 포함한 비만예방 교육자료 등
 - * 학교 외에 학교 밖쉼터 청소년 등에게도 관련 교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력

- 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해 건강 생활습관 형성 교육 등 제공하는 '건강한 돌봄놀이터' 사업* 지속

- * 전국 보건소를 통해 놀이 영양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

- 청소년 수련시설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지도·점검 지속

- 저소득층 등 취약 청소년, 학교 밖 청소년 등 대상으로 기본적인 급식지원 강화 추진

□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강화(여가부, 지자체)

-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성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추진

- * 9~24세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성 청소년 대상, 월 13천원('23년~)

- 전자바우처('19년~) 사용 관련 불편·개선 사항 등 모니터링하여 개선하고, 온라인 구매 확대 등 사용처* 확대 추진

- * (예시) 주요 역사 내 생리대자판기 설치 등

5-1. 청소년정책 인프라 개선

- ① 법·재원 등 청소년 정책기반 체계화
- ② 청소년지도자 지원 및 전문성 제고
- ③ 청소년 시설·기관·단체 운영 개선·지원

5-2. 지역 맞춤형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구축

- ① 지자체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내실화
- ② 지역 단위 청소년정책 협력 강화
- ③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 지원

5-1. 청소년정책 인프라 개선

- ◆ 법·제도 및 재원 등 정책기반 개선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
- ◆ 청소년 지도자 역량강화 등 통해 청소년 지원체계 전문성 강화
- ◆ 청소년 관련 기관, 시설 등 운영 체계화를 통해 효율성 향상

1 법·재원 등 청소년 정책기반 체계화

□ 「청소년 기본법」 개정(여가부)

- 청소년을 육성 등 수동적 존재에서 능동적·적극적 존재로 전환하고, 통합적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「청소년기본법」 개정
 - 현재 육성 중심의 청소년정책 관점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모든 삶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개정 방향 검토
 - * 법률 전반 '청소년 육성' 명칭 변경,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명칭 변경(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→ 청소년정책 기본계획) 등

□ 청소년정책 재정기반 효율화(여가부, 지자체, 교육부(교육청))

- 현 청소년정책 관련 재원(일반회계 및 청소년육성기금) 운영 관련 현황 파악 및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재원확충 및 운용방안 마련
 - 청소년정책 예산 수립·집행의 효율성 제고 위해 청소년육성기금 사업 중 일부 일반회계 전환 등 검토
- 청소년육성기금 수입구조 다변화를 위해 전입 가능한 신규 재원 발굴
 - * 현재 경륜·경정 전입금 중심의 수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방안 등
- 지자체와 시·도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사업 연계 및 예산 지원 방안 등 마련

【법령상 과태료 수입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례】

- ① (국가기금) 「도로교통법」에 의한 과태료 및 범칙금을 응급의료기금 재원으로 규정한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- ② (지방기금)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수수료, 과태료, 이행강제금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으로 규정한 「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□ **청소년정책 대국민 홍보 강화(여가부, 지자체)**

- SNS, 인터넷 등 다매체를 통한 청소년정책 관련 홍보 캠페인 강화
-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청소년 대상 청소년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자기계발·성장을 지원하는 ‘(가칭)청소년키트’* 제공 검토
 - * 청소년키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(정책) 안내 자료, 진로활동, 직업체험 및 문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 참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바우처 카드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 및 지원 가능

【관련 사례】

- ① 세종시 꿈끼카드: 관 내 거주 중인 중학교 1학년 재학생(만13세 학교밖 청소년 포함)에게 연 10만원의 바우처 카드 지급
- ② 서울시교육청 모든 초등학생 대상 입학준비금 20만원 지급
- ③ 서울전입청년 웰컴박스: 타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청년 대상 웰컴박스(안내책자, 알쥐카드, 선택물품) 배송으로 서울시 청년정책 홍보 및 생활정보 제공

② 청소년지도자 지원 및 전문성 제고

□ **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(여가부)**

- 청소년지도자 대상 디지털 전문교육 역량 제고 지원
 -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,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, 청소년복지시설의 청소년지도자 관련 전문·직무연수과정에 디지털 관련 연수과정 확대
 - * 디지털 저작권 관련 역량강화 교육 실시 등
 - 양질의 디지털 교육운영을 위해 전문가 풀 운영 및 전문교육과정 콘텐츠 연구·개발 추진

- 현장중심 활동을 위해 지역별·거점별 청소년지도사·상담사 보수교육을 확대하고, 사례중심 워크숍 등 현장기반 보수교육 과정 확대
- 청소년지도자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과 연계하여 전문교육과정 운영(무료교육)
- 청소년 지도자 현행 자격검정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자격검정 개편 추진
 - * 필요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·운영, 직능단체 등 대상 의견수렴 등 실시

□ 청소년지도자 직무현황 분석 및 처우개선(여가부)

- 청소년수련시설, 상담복지센터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, 상담사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정책자료 등으로 추후 활용
- 청소년지도사, 상담사의 배치실태, 직무현황 등 관련 데이터 집적·관리
-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

③ 청소년 시설·기관·단체 운영 개선·지원

□ 청소년수련시설 용어 개선 및 맞춤형 사업 추진(여가부, 지자체)

-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설종류 간소화 및 친숙한 용어로 변경
 - *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문화의집, 청소년특화시설 → 청소년센터
 - 개별시설 명칭은 지역 환경·특성이나 해당 시설의 주요사업,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사용토록 검토
 - * (예시) ○○청소년센터, ○○어울림센터, ○○진로센터, ○○센터 등
- 국립과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공동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청소년 프로그램 다양화

- 청소년 수련시설의 지역별·유형별 특성에 기초한 맞춤형 사업 개발·추진

□ 청소년 지원기관 및 단체 운영 지원(여가부)

-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수 등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 마련
 - *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평균 발생인원 관할 면적 인프라 등 종합 검토를 통한 효율적 운영 관리
- 청소년단체의 현황 및 운영 실태 파악을 기초로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

5-2. 지역 맞춤형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구축

- ◆ 지역 청소년정책 인력 및 조직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 내실화
- ◆ 지역사회 내 청소년정책 관련 연계·협력 활성화
- ◆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 지원을 통해 지역별 청소년지원 형평성 제고

① 지자체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내실화

□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 확대 및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활성화(여가부, 지자체)
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25조(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) 개정을 통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고, 자격기준 설정 등 선발제도 마련 검토
 - *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례 등 검토
-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체계 마련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 표준(안) 개발 및 보급
- 지자체 청소년정책 분석·평가와(연 1회) 연계하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우수사례 확산
 - * 우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선정·공표, 해당 지자체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

□ 지자체 청소년정책 분석·평가 개선(여가부)

- 지자체 청소년정책·사업에 대한 평가를 환류를 통한 개선 중심 성과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평가항목 개편 추진
- 지자체 청소년정책 분석·평가결과 대국민 공개 및 활용
 - * 현재 포상·행사 중심의 결과 공개 외에 평가결과 확산 방안 마련
- 지자체 청소년정책 분석·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등 지원
 - *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(예 : 상위 5%) 소속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대상 정부포상 실시

② 지역 단위 청소년정책 협력 강화

□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전국 확대(여가부, 지자체)

-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확대·개편하여 지역사회 분야별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서비스 간 연계·복합화 추진
 - *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시설·센터, 지자체, 학교, 교육(지원)청, 민간기관 등
 - * (서비스 복합화 사례)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,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등
- 지자체 특성·여건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, 청소년정책 수요조사, 자원 맵(Map) 제작·보급, 청소년활동 공간 조성 등 특화 사업 추진
-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「청소년 성장지원 혁신지역」 시범 운영*
 - * 도시형, 농촌형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복합화 서비스 모형

□ 청소년정책-지자체-교육청 간 협력 강화(여가부, 교육부(교육청), 지자체)

- 학교안팎 청소년정책 연계를 위한 여성가족부-시·도-교육청 간 중앙단위 협력 체계 구축
 - * 여성가족부-시·도 교육청 간 협력 제도화를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전국 시·도 교육감협의회 회장 참여 제도화 추진(청소년기본법 개정)

- 청소년정책-학교교육 간 연계·협력을 위한 교육청 조례 제정 권장
* (예시) 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지역사회 학교안팎 연계 우수 지자체 사례 확산 및 포상 등 지원

□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공헌사업 연계(여가부, 지자체)

- 지역 청소년정책사업과 지역 내 기업체 또는 공공기관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 가능한 청소년정책 사업 발굴 및 연계 협의
- 민간기업(기업체)이나 공공기관 대상 청소년 관련 공익적 사업·활동 유도를 위한 청소년정책 및 사업 정보 제공 확대

③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 지원

□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 지원 위한 제도 개선(행안부, 여가부, 지자체)

-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적 지원대상에 청소년을 포함하기 위한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개정 검토
* (예시) 법 제17조(청년·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) 지원 대상에 청소년 포함, 제22조(교육기반의 확충), 제23조(의료기반의 확충), 제24조(문화기반의 확충) 등 청소년 정책 연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·협의
-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 지원을 위한 「청소년기본법」 개정* 및 지자체 조례 제·개정 추진
* 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를 개정하여 '인구감소 지역 청소년' 관련 내용 추가 등

□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 정책적 지원 확대(여가부, 지자체)

-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화 사업 등 개발·추진
- 청소년의 지역생활권 내 이동권 보장 지원
 - 공공시설에서 사용하는 셔틀버스 지원, 읍면단위 공공셔틀버스 운영 등 청소년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 및 추진

VI. 과제별 소관기관

붙임

과제별 소관부처

대과제	중과제	소과제	세과제	소관부처
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	1-1. 청소년 디지털역량 활동 강화	1-1-1. 디지털 활동 및 교육 지원	1-1-①-1 디지털 기반 활동 기회 확대	여가부, 과기정통부
			1-1-①-2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활성화	교육부, 과기정통부
			1-1-①-3 디지털 교육 사각지대 해소	과기정통부, 교육부
			1-1-①-4 디지털·미디어 문해력(Literacy) 함양	교육부, 과기정통부, 문체부, 방통위
			1-1-①-5 디지털 윤리규범 확산·실천	과기정통부, 방통위, 문체부, 여가부, 각 부처
		1-1-2.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디지털 기반 개선	1-1-②-1 청소년활동 데이터 관리·활용 지원	여가부, 지자체
	1-1-②-2 청소년활동 디지털 플랫폼 구축		여가부	
	1-1-②-3 디지털 청소년활동 공간 구축		여가부	
	1-2. 청소년 미래역량 제고	1-2-1. 미래역량 제고 활동 확대	1-2-①-1 청소년활동 역량지표 개선 및 커리큘럼 개발	여가부
			1-2-①-2 신기술 신산업 및 환경 분야 청소년활동 지원	과기정통부, 해수부, 환경부, 여가부, 지자체
			1-2-①-3 금융·경제 분야 청소년 교육 실시	금융위, 기재부, 교육부, 여가부
		1-2-2. 진로체험 및 교육 지원	1-2-②-1 전문 분야별 진로탐색 활동 지원	과기정통부, 해수부, 농림부, 산림청
			1-2-②-2 진로체험기관 간 협업 통한 체험기회 확대	여가부, 교육부, 지자체
			1-2-②-3 청소년 진로 정보제공 및 교육 강화	교육부
	1-3.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	1-3-1. 테마별 활동기회 제공	1-3-①-1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	여가부, 외교부, 환경부
			1-3-①-2 문화예술 분야 활동·교육 지원	여가부, 문체부, 교육부
			1-3-①-3 생활체육 및 스포츠 체험 기회 확대	여가부, 지자체, 문체부, 교육부
		1-3-2. 자기주도적 활동 프로그램 확대	1-3-②-1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활동 강화	여가부, 교육부, 지자체
1-3-②-2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운영 활성화			여가부	
1-3-②-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내실화			여가부, 행안부	

	1-4. 학교안팎 청소년활동 지원 강화	1-3-3. 안전한 청소년활동 기반 마련	1-3-③-1 청소년수련시설 정보관리 체계화	여가부	
			1-3-③-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내실화	여가부	
			1-3-③-3 청소년활동 안전인식 확산	여가부, 교육부, 해수부	
		1-4-1. 학교 연계 청소년활동 지원	1-4-①-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 학교 협력 강화	1-4-①-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 학교 협력 강화	여가부, 교육부(교육청)
				1-4-①-2 학교시설 활용 청소년활동 확대	교육부, 여가부, 지자체
			1-4-2. 지역사회 연계 학교안팎 청소년활동 강화	1-4-②-1 지역 내 소규모 청소년활동 공간 설치·운영	여가부, 지자체
				1-4-②-2 지역 내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및 돌봄 활성화	여가부, 교육부, 복지부, 지자체
				1-4-②-3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협력·지원체계 내실화	여가부, 지자체, 교육청
	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	2-1. 위기청소년 복지지원체계 강화	2-1-1. 위기청소년 발굴 및 치유지원 강화	2-1-①-1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및 상담 지원 확대	여가부, 교육부
				2-1-①-2 고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·특화서비스 제공	여가부, 교육부
				2-1-①-3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치유인프라 확대 및 지원	여가부, 교육청, 산림청
			2-1-2. 지역 중심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	2-1-②-1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활성화	여가부, 지자체
				2-1-②-2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확대 운영	여가부, 지자체
2-1-②-3 전문기관·학교 간 청소년 위기 공동대응 협력				여가부, 교육부(교육청), 복지부, 지자체	
2-1-3. 정보시스템 기반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운영			2-1-③-1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	여가부	
			2-1-③-2 청소년상담1388 시스템 고도화	여가부	
2-2.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			2-2-1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	2-2-①-1 학교 밖 청소년 발굴·연계 협력 강화	여가부, 교육부(교육청)
		2-2-①-2 학교 밖 청소년 학업·진로지원 확대		여가부, 교육부	
		2-2-①-3 학교 밖 청소년 활동 지원 강화		여가부, 교육부, 지자체, 문체부	
		2-2-①-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프라 확대		여가부	
		2-2-2.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	2-2-②-1 가정 밖 청소년 학업·취업 등 진로지원 강화	여가부, 교육부, 고용부	
			2-2-②-2 가정 밖 청소년 경제 및 주거 지원 확대	여가부, 지자체, 국토부	
	2-2-②-3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기반 강화		여가부		
	2-2-②-4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이용 지원 내실화		여가부		
	2-2-3. 후기 청소년(19~24세) 안정적 삶 지원	2-2-③-1 후기 청소년 진로·직업교육 실시	여가부		
2-2-③-2 후기 청소년 창업시장 진입 지원		중기부			
2-2-③-3 후기 청소년 취업 지원		고용부			
2-2-③-4 후기 청소년 건강 및 주거 지원		복지부, 여가부, 국방부, 국토부			

	2-3.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	2-3-1.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	2-3-①-1 다문화가족 청소년 학습 및 사회적응 지원	여가부, 교육부
			2-3-①-2 이주배경 청소년 종합 통계 구축 및 지원	여가부, 통계청, 교육부, 법무부, 통일부
		2-3-2. 청소년(한)부모 생활·양육 지원	2-3-②-1 청소년(한)부모 사례관리 및 학업 지원	여가부, 교육부
			2-3-②-2 청소년(한)부모 양육비 지원 강화	여가부
		2-3-3. 신 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	2-3-③-1 가족돌봄청(소)년 실태파악 및 지원체계 마련	복지부
			2-3-③-2 가족 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	법무부, 지자체, 여가부, 복지부
			2-3-③-3 은둔형 청소년 발굴 및 지원	여가부, 복지부, 지자체
			2-3-③-4 채무상속 위기청소년 법률지원 제공	여가부, 지자체, 법무부
		2-3-4. 장애 및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	2-3-④-1 장애청소년 부모 지원 및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방안 마련	복지부, 교육부, 여가부
		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	3-1. 청소년이 안전한 온·오프라인 환경 조성	3-1-1. 디지털 역기능 예방
3-1-①-2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지원	여가부			
3-1-①-3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지원	개인정보보호위			
3-1-2. 사이버 및 학교폭력 예방 강화	3-1-②-1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및 인식 확산			교육부, 여가부
	3-1-②-2 학교폭력 방지 및 대응체계 활성화			여가부, 교육부
	3-1-②-3 사이버 및 학교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			교육부, 여가부, 경찰청
3-1-3.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	3-1-③-1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 지원			경찰청, 여가부, 방통위, 사감위
	3-1-③-2 유해약물 유통 차단 및 오·남용 예방 강화			식약처, 경찰청, 여가부, 교육부, 지자체, 복지부
	3-1-③-3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강화			여가부, 경찰청, 지자체
3-1-4. 청소년 친화형 생활 환경 구축	3-1-④-1 청소년 밀집지역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			지자체
	3-1-④-2 지역 내 청소년 친화 디자인 조성			지자체
	3-1-④-3 청소년이 안전한 보행 환경 마련			지자체, 경찰청

	3-2.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회복 지원	3-2-1. 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응 강화	3-2-①-1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실태 파악	여가부
			3-2-①-2 기업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치 지원	방통위
			3-2-①-3 아동·청소년 성범죄자 검거체계 강화	경찰청, 방통위
		3-2-2. 청소년 성범죄 피해 지원 및 예방교육 확대	3-2-②-1 성범죄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	여가부, 경찰청, 방통위, 지자체
			3-2-②-2 대상별 맞춤형 성범죄 예방 교육 확대	여가부, 교육부
			3-2-③-1 청소년 법 위반 유발 방지 및 선도보호	여가부, 경찰청
		3-2-3. 청소년 선도보호 및 회복지원	3-2-③-2 소년범죄 통계관리 및 인프라 확충	법무부
			3-2-③-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확충 및 지원	여가부
			3-3. 청소년 근로보호 강화	3-3-1. 근로유형별 청소년 보호 강화
	3-3-①-2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권리 보호	교육부, 고용부		
	3-3-①-3 예·체능 분야 청소년 보호	문체부, 방통위		
	3-3-2. 근로청소년 부당처우 예방 및 보호	3-3-②-1 근로청소년 부당처우 구제 지원		여가부, 고용부
		3-3-②-2 근로환경 모니터링 및 감독 내실화		여가부, 고용부
	3-3-3. 청소년과 사용자의 근로보호 인식 확산	3-3-③-1 청소년 대상 근로보호 및 직업윤리 교육 지원		여가부, 고용부, 교육부
		3-3-③-2 청소년 고용사업자 근로보호 교육 실시	여가부, 고용부	
청소년의 참여·권리 보장강화	4-1. 청소년 참여 활동 강화	4-1-1.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기회 활성화	4-1-①-1 청소년 자치활동 참여 확대	지자체, 여가부, 교육청
			4-1-①-2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확대	여가부, 지자체, 교육부(교육청)
			4-1-①-3 청소년정책 참여활동 지원	지자체, 여가부, 법제처
		4-1-2. 청소년 참여 역량 제고 및 소통 강화	4-1-②-1 청소년 참여역량 강화	여가부, 지자체
			4-1-②-2 청소년 간 소통 강화 및 공동체 역량 함양	여가부, 지자체
			4-2. 청소년 권익 증진	4-2-1. 청소년 권리 보장 및 대표성 제고
	4-2-①-2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대표성 강화	여가부, 지자체, 관련부처		
	4-2-2. 청소년 건강 및 생활 지원	4-2-②-1 청소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		여가부, 교육부, 질병청
		4-2-②-2 건강한 생활습관 지원 및 급식 사각지대 완화		복지부, 교육부, 여가부, 식약처, 지자체
		4-2-②-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강화		여가부, 지자체

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	5-1. 청소년정책 인프라 개선	5-1-1. 법·재원 등 청소년 정책기반 체계화	5-1-①-1 「청소년 기본법」 개정	여가부	
			5-1-①-2 청소년정책 재정기반 효율화	여가부, 지자체, 교육부(교육청)	
			5-1-①-3 청소년정책 대국민 홍보 강화	여가부, 지자체	
		5-1-2. 청소년지도자 지원 및 전문성 제고	5-1-②-1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	여가부	
			5-1-②-2 청소년지도자 직무현황 분석 및 처우 개선	여가부	
		5-1-3. 청소년 시설·기관·단체 운영 개선·지원	5-1-③-1 청소년수련시설 용어 개선 및 맞춤형 사업 추진	여가부, 지자체	
			5-1-③-2 청소년 지원기관 및 단체 운영 지원	여가부	
		5-2. 지역 맞춤형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구축	5-2-1. 지자체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내실화	5-2-①-1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 확대 및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활성화	여가부, 지자체
				5-2-①-2 지자체 청소년정책 분석·평가 개선	여가부
	5-2-2. 지역 단위 청소년정책 협력 강화		5-2-②-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전국 확대	여가부, 지자체	
			5-2-②-2 청소년정책-지자체-교육청 간 협력 강화	여가부, 교육부(교육청) 지자체	
			5-2-②-3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공헌사업 연계	여가부, 지자체	
	5-2-3.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 지원		5-2-③-1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 지원 위한 제도 개선	행안부, 여가부, 지자체	
			5-2-③-2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 정책지원 확대	여가부, 지자체	